

**KEI**

연구보고서  
2019-05

#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Enhancing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ies  
: Focusing on Environmental Culture

조공장 · 정우현 · 김도균 · 김수빈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우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도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 ■ 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재근 (환경부 갈등조정팀 사무관)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
이민호 (경희대학교 교수)
이정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한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응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a href="http://www.kei.re.kr">http://www.kei.re.kr</a>
인 쇄	2019년 10월 26일
발 행	2019년 10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371-0 93530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이 보고서의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조공장 외(2019),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 요약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문제를 넘어 철학과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환경 소통의 수단이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고, 생활 속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참여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환경적인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
-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의사결정 시 환경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환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환경오염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의 태도, 신념, 행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학문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예술, 과학, 윤리, 종교 등과 같은 정신 활동의 산물’인 협의의 문화와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로 인한 산물’인 광의의 문화로 구분됨

- 환경문화는 19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전함
  - 이에 환경문화는 인류가 지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한 특정 유형의 문화로 (Schumacher, 2013), 문화가 인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처리하는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문화적인 가치는 환경 행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사회의 법, 제도, 조직,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함

##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정책 분야에서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책에 대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책과 국민 간에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허범, 1982; 김재근, 권기현, 2007; 채종현, 2017)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정책 수용성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의지와 태도, 실제 행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적인 이론들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실제 행동(실천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 3.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

- 국가별, 지역별, 사례별로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환경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기반이 됨
-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리하면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요인은 정책이 진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인들로 보상금, 인센티브, 주민들의 생존권, 서식지 파괴, 입지문제 등이 해당됨
  - 간접적인 요인은 앞서 정의한 광의의 문화에 해당하는 개인, 집단, 사회의 관습 및 규범 등으로 약한 규제, 낮은 시민의식, 상호 신뢰 부족, 의사소통 미흡, 정보제공 부족 등이 해당됨

## III. 수용성 요인 분석

###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 공공정책 및 환경정책 사례 (6개<sup>1)</sup>)에 대하여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분석 결과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와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미흡한 사후관리, 홍보와 교육 부족, 협력과 책임성 부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낮은 실효성,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이 있음
  -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개인의 이기심, 잘못된 편견, 편리함 추구 등이 있음

1) 수도권 통합요금 제도, 도로명주소 제도, 빈 용기 보증금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제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쓰레기 불법소각금지 정책.

##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성 요인 분석

-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관련되어 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표 1>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구분	수용성 요인
정책참여,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대중들의 정책참여</li> <li>· 정책을 ‘만드는 집단’과 ‘받아들이는 집단’ 간의 전달체계 (예) 효율적·체계적인 중간 지원조직</li> </ul>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li> <li>·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기관에 대한 신뢰</li> <li>·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의사소통 체계</li> </ul>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들의 자율관리 방안</li> <li>· 국제적인 표준의 적용 (예) SDGs 보고서, CSR 보고서 등</li> <li>· 인센티브</li> </ul>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정책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li> <li>· 정보공개, 회의공개 등을 통한 신뢰</li> <li>·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정부, 기관 등의 피드백</li> </ul>
정보제공, 정책홍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대중들이 전문적인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식</li> <li>· 세대별 특징 등으로 고려한 정책홍보</li> <li>· 공동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학습</li> </ul>

## 3. 수용성 요인 정리

-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유사한 특성끼리 묶어주는 그룹핑 작업을 통해 7개로 정리함
- 직접적 요인: 보상금, 인센티브, 생존권문제, 입지문제, 서식지 파괴 등
  - 약한 규제와 낮은 시민의식

- 상호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i. 정책의 내용을 몰라서 수용하지 못하거나, ii.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이기심과 편리함 추구로 인해 수용하지 않거나, iii.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정책의 당위성 및 방법이 납득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홍보, 교육, 토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보장
- 실용적인 정보생산과 체계적인 정보전달
-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 IV.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 본 연구에서 앞서 도출된 수용성 요인들을 기반으로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면 i. 정책형성문화, ii. 조직·집단문화, iii.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iv. 소통문화임
- 정책형성문화: 전문가와 관료 중심에서 수요자와의 협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매체·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형성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
- 조직·집단문화: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집단의 문화를 의미하며, 전문가의 공개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정부의 맞춤형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강화, 규제적 성격의 기준주의와 계획적 성격의 목표설정이 중요함
- 소통문화: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통합적이고 흥미 있는 소통방식의 개발

□ 환경문화 유형별로 제안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표 2>와 같이 정리함

<표 2> 환경문화 유형별 정책 제안

문화유형	구분	정책 제안
정책형성문화의 전환	정책제안1	· 정책평가(사전, 사후 포함)제도 도입
	정책제안2	· 아젠다 설정단계의 공론화 도입
	정책제안3	· 숙의형 참여기법의 도입
조직/집단문화의 전환	정책제안1	· 회의공개제도의 도입
	정책제안2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강화
	정책제안3	· 집단 맞춤형 친환경지침의 보급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정책제안1	· 계획입지제도의 도입
	정책제안2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
	정책제안3	· 갈등조정을 위한 공청회 방식 개선
	정책제안4	· 환경/문화/교통/갈등영향평가의 통합
소통문화의 전환	정책제안1	· 환경인플루언서 3만 명 보급
	정책제안2	· 통합형 환경정보 발신 시스템
	정책제안3	· 불편하게 하는 세입 캠페인

## V. 결론

- 본 연구는 환경문화 측면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소통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헌조사, 사례조사 외에 현장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음

주제어 : 환경문화, 사회적 수용성, 정책 수용성,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 | 차례 |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구조 .....	3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5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
가. 문화의 정의와 분류 .....	6
나. 정책에서 환경문화에 대한 논의 .....	8
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환경문화 .....	10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1
가. 수용성 정의 .....	11
나. 정책 수용성과 관련된 이론 .....	14
다. 환경정책에서 정책 수용성의 중요성 .....	17
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수용성 .....	20
3. 수용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 .....	20
가.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국외 선행연구 .....	20
나.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국내 선행연구 .....	26
다. 수용성 요인 선행연구 정리 .....	27
제3장 수용성 요인 분석 .....	30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	31

가. [사례1]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	32
나. [사례2] 도로명주소 .....	35
다. [사례3] 빈용기 보증금제도 .....	38
라. [사례4] 재활용품 분리배출 .....	41
마. [사례5] 일회용컵 사용규제 정책 .....	46
바. [사례6]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	50
2.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수용성 요인 정리 .....	53
3.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성 요인 분석 .....	54
가. 정책참여와 거버넌스 .....	55
나.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형성 .....	57
다.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규제 .....	58
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정책 수용성 .....	59
마. 정보공유 및 홍보, 학습 .....	60
4. 소결 .....	63
가. 직접적 요인 .....	64
나. 약한 규제 및 낮은 시민의식 .....	64
다. 상호 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	64
라.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	64
마. 정책수립 절차와 주민참여 .....	65
바. 정보와 수용성 .....	65
사. 정책수립 및 집행집단 내부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	65
 제4장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	 66
1.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의 유형 .....	66
가. 정책형성문화의 특징 .....	67
나. 조직·집단문화의 특징 .....	67
다. 선(先)개발·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	68
라. 수용자의 소통문화 .....	69

2.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70
가.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70
나.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	72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75
가. 조직·집단문화의 현황과 개선방향 .....	75
나. 조직·집단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	77
4.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	82
가. 개발우선문화에서의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 .....	82
나. 선(先)개발 후환경의 개발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	84
5.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88
가.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	88
나.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	90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	 97
 Executive Summary .....	 107

## | 표차례 |

〈표 2-1〉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 .....	8
〈표 2-2〉 국가별 폐기물 처리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
〈표 2-3〉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례별 수용성 요인 .....	28
〈표 3-1〉 수용성 요인 도출을 위한 사례분석 목록 .....	32
〈표 3-2〉 국가별 비용기 회수율 및 재사용 횟수, 재사용률 .....	39
〈표 3-3〉 재활용품 선별 및 활용(2017년 지자체 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	43
〈표 3-4〉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불법소각 특별점검 결과(2017년 기준) .....	52
〈표 3-5〉 심층사례 분석으로 도출된 사례별 수용성 요인 .....	53
〈표 3-6〉 환경정책 수용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요 .....	54
〈표 3-7〉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	62
〈표 5-1〉 환경문화 유형별 정책제안 .....	94

## | 그림차례 |

〈그림 1-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문화의 범위 .....	2
〈그림 1-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수용성의 범위 .....	3
〈그림 1-3〉 연구 추진 구조 .....	4
〈그림 2-1〉 사회적 수용성 프레임워크 .....	12
〈그림 2-2〉 합리적 행동이론 .....	16
〈그림 2-3〉 계획된 행동이론 .....	17
〈그림 3-1〉 시도별 대중교통 환승 횟수 현황(2018년 기준) .....	33
〈그림 3-2〉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2010~2016년) .....	44
〈그림 3-3〉 수용성 요인을 구조화하는 작업 .....	63
〈그림 4-1〉 정책형성문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 .....	71
〈그림 4-2〉 조직·집단문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 .....	76
〈그림 4-3〉 개발우선문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 .....	83
〈그림 4-4〉 소통문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 .....	89



# 제1장

##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은 지식과 기술의 문제만이 아닌 철학과 문화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탈원전 및 탈석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이 제도와 기술을 넘어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친환경적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사회가 발달하게 되면서 환경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환경정책, 친환경 실천 등 국가나 개인 수준에서 환경 의사결정에 있어 환경문화(Environmental Cultur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 의사결정(Environmental Decision Making)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의 중요성은 이론적인 부분을 넘어 실질적인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발생한 탈원전과 관련한 신고리 5, 6호기의 공론화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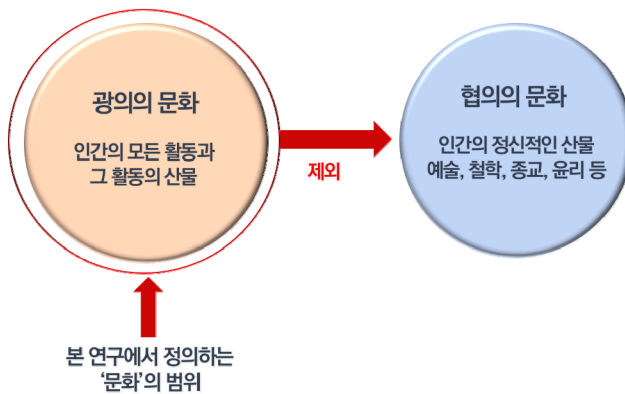
이는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환경문화는 ‘환경소통’(Environmental Communication) 수단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고의 문제, 생활 속 습관과 실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의 중심축이 되는 문화와 수용성에 대해 학자별, 학문별, 국가별로 다양한 정의 및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에 2장에서 그 정의와 분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지만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론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문화와 수용성의 정의 및 범위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의 경우 크게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의 산물’로 정의되는 광의의 문화를 범위로 하며, 그중 인간의 정신적인 산물인 예술, 철학, 종교, 윤리 등의 협의적인 부분은 제외하고자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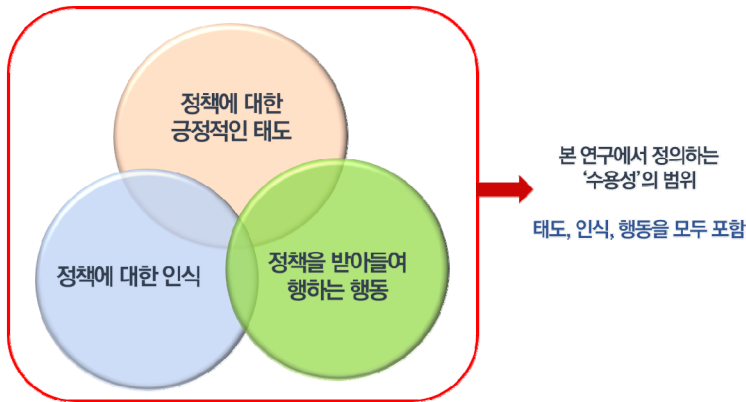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문화의 범위

다음으로 수용성의 경우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실제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그림 1-2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수용성의 범위

###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구조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필요성, 범위, 내용 등 전반적인 연구 추진 체계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문화의 정의와 분류,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수용성의 정의와 관련한 이론 등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문화와 수용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환경정책에서의 정책 수용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국내외 선행연구의 문헌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절차를 거쳐 수용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용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가 있으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논의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요, 수용성 현황,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문기사,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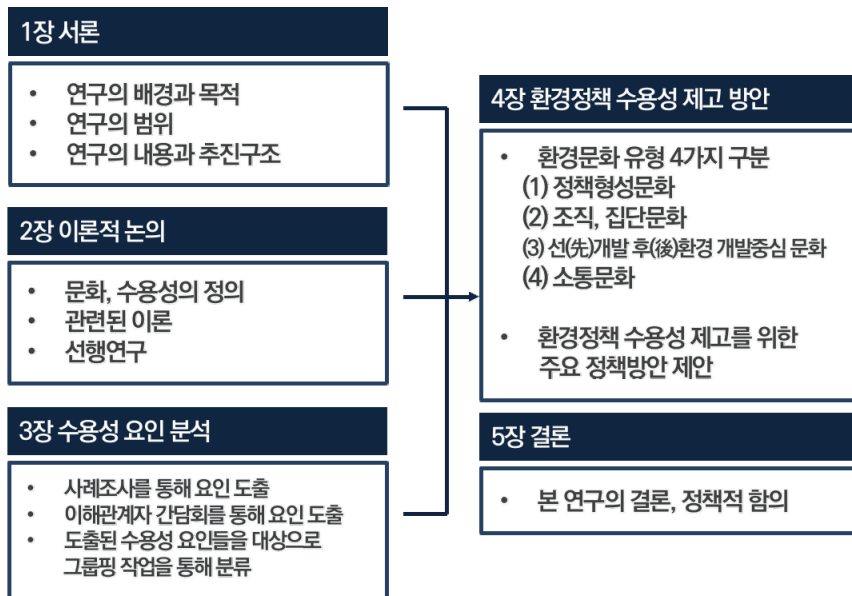
둘째,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수용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공무원, 대학생, 청년환경운동가, 기업인, 매체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경험 등에서 나온 수용성 요인을 정리한 단계로, 실제 현장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을 정리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들에 대해 연구진을 중심으로 수용성 요인들을 그룹핑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수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의 유형을 i. 정책형성문화, ii. 조직·집단문화, iii.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iv. 소통문화로 구분하여 해당 문화의 특징,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추진 구조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3> 연구 추진 구조

## 제2장

#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1960년대까지 환경문제의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1962년 무분별한 유독물질 사용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여 집필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통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학문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행동과학으로서의 심리학자들은 환경문제로 이어지는 인간의 인지 및 행동 이론을 개발하고 지속가능성을 향한 프로그램들을 평가함과 동시에 문화가 환경 태도, 신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오고 있다(Schultz, 2002).

최근 들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과 문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기반이 되는 문화의 정의와 분류, 환경문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문화의 정의와 분류

### 1) 문화의 정의

문화는 가장 복잡한 영어단어 중의 하나로(Raymond Williams, 1976),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되어 왔으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의적이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간의 상호 접근과 이해 및 교류가 필요하다. 이에 대표적인 학자들이 정의한 문화에 대해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문화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Culture, 文化)의 어원을 살펴보면 농업에서의 ‘재배하다, 경작하다, 땅을 갈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되었으며, 16세기 농경사회 개념에서 사용되어 오다가 근대 초기부터 인간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정치적·사회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정우락 외, 2015).

연구대상 자체가 문화인 인류학자들의 경우 문화를 포괄적이며 총체론적 관점에서 정의한 Tylor(1871)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지식, 신념, 예술, 법, 도덕, 관습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된 능력이나 관행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이다(김주관, 2010). 이에 미국 인류학자 Clifford Geertz(1973)는 문화란 “삶에 대한 인간들의 지식과 태도를 소통하고,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상징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전달된 개념의 체계”라고 정의하였다.<sup>2)</sup>

한편 프랑스 사회학자 Pierre Bourdieu의 경우 문화를 “공동체의 다수에 의해 획득되고 공유되는 규범과 가치의 총체”라고 정의하였으며(김동일, 2016), Tuschinsky는 문화를 “다양한 조건들과의 직접적인 충돌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들의 열린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바뀌면서 문화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진철, 2014).

Raymond Williams(1982)에 의해 문화는 ‘정신 활동의 소산’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삶의 양식의 총체’라는 넓은 의미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아래에 있는

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 검색어: 문화 정의, 검색일: 2020.5.29.

여러 식민지국가들의 문화를 비교연구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후 20세기 중후반에 노동자들의 문화와 대중문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넓은 의미의 문화적 개념이 국제적으로 사용되었다(양현미, 심광현, 박건희, 2007).

이 외에도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학문별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삶과 그 삶이 모여 이룬 사회의 모든 결과물이 문화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당대 사회의 발전 혹은 퇴보를 보여준다.

## 2) 문화의 분류

주로 사회학에서 문화를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광의의 문화는 ‘사회적 인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산물을 물질문명(기계나 건축물, 발명품 등)과 구분하여 ‘가치, 신념, 사고방식, 이론, 철학, 문학, 언어, 생활양식 등’이 협의의 문화이다(최연구, 2006).

이러한 구분 하에 반 퍼슨(C.A. van Peursen)은 광의의 문화를 ‘인간이 자연을 객관화하고 변화 및 발전시키는 것’으로, 협의의 문화를 ‘인간의 정신적 산물로 예술, 철학, 과학, 윤리, 종교 등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sup>3)</sup>

또한 박광무 외(2013)는 한국의 문화정책 맥락에서 광의의 문화를 ‘인류적 보존의 가치를 지닌 제반의 정신적·물질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와 결과적인 산물 일체’로 정의하였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문화의 영역과 예술적, 심미적인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조합한 창조행위와 예술적 창조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 삶의 제반 양식과 수단으로서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일컫는 것’을 협의의 문화로 규정하였다(박광무 외, 2013).

정리하면 광의의 의미에서 문화란 자연에 대립되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의 산물을 가리킨다. 이것은 인간만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념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며, 인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사회과학적, 인류

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 검색어: 문화 정의, 검색일: 2020.5.29.

학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지적, 실천적, 정신적, 물질적 산물, 즉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모든 활동의 산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반면에 협의의 문화는 인간의 모든 활동 중에서 경제적, 정치적인 활동과 구분되는 활동인 정서적 가치의 표현을 말한다. 즉, 문화는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 활동의 산물이다. 창조적 사고와 행위는 환경세계에 대하는 인간 자신의 이해에 대한 표상으로 창조적인 행위는 인간 본래적인 능력이며, 품성으로 인간의 표현적 욕구에 기인한다. 여기에는 학문, 예술, 종교활동 및 그 산물들이 포함되는데, 비록 예술작품이 아니더라도 특수한 건축과 공산품들이 문화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실용성의 차원이 아니라 예술성 혹은 심미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1〉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

구분	내용
광의의 문화	-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의 산물 - 인간의 지적, 실천적,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활동의 산물
협의의 문화	- 인간의 모든 활동 중에서 경제적, 정치적인 활동과 구분되는 정서적 가치의 표현 -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활동의 산물

자료: 저자 작성.

## 나. 정책에서 환경문화에 대한 논의

1992년 리우 지방의제 21 이후 많은 서구 국가들의 공공 정책에 대한 참여는 더욱 분권화되었으며, 1998년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sup>4)</sup>이 각 정부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었다(Wenqi Dang, 2018, pp.1-2). 특히 서구권 국가들은 환경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참여가 현재 수준 보다 더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 고민하였고, 대부분 비슷

4)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에서 만든 국제적 환경에 관한 조약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해 시민참여와 관련된 협약이다(UNECE, "Aarhus Convention", 검색일: 2020.1.2).

한 단계를 거쳐 변화하였다. 다만 EU 국가들의 경우 공식적으로 같은 목표를 공유하였음에도 이를 실행하는 정책은 모두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들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다른 문화들이 잠재적으로 대중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으며(Wenqi Dang, 2018, pp.2-3), 이것이 환경문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환경적인 문제는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므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집합적으로 행동할 때 사람들이 노력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arau and Willians, 1993: P. Wesley Schultz, 2002, p.9에서 재인용). 즉,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사람들은 ‘내가 조직의 작은 부분에 속할 때 왜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며, 실제로도 조직의 크기가 커지면 사람들은 덜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에 집합적인 문화의 다른 측면을 보아야 한다(Schultz, 2002).

예를 들어 Schumacher(2009)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이 심각할 때 환경주의자처럼 행동하거나 그린 문화(green culture)를 채택하지만 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제시했다. 이는 환경문화의 수준이 사회적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사회적인 규범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응답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Schumacher, 2013).

이렇듯 문화적인 요인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존재하며, 다른 관련 요인들과 공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Dang, 2018). 이에 Merelman는 문화가 갈등적인 민주주의 참여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인 표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Martinez, Paolisso는 문화적인 가치는 환경 행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고 보았다(Dang, 2018). 이러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심은 문화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처리하는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인류가 지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한 특정 유형의 문화를 환경문화라고 부른다(Schumacher,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환경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환경문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는 시대별, 국가별, 학자별 등으로 그 정의와 분류가 다양하다.

다만 다양한 정의 속에서 공통된 부분은 문화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 모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출물로 사회, 경제, 정치, 법·제도, 기술·과학적인 측면의 발전을 이끄는 기본 조건이자 핵심 전략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함과 동시에 헌법에 문화국가의 조항을 수용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문화 담론이 형성되어 2000년대 들어서는 시민단체, 국민 등이 정부 문화정책의 주체가 되거나 정책평가의 기준 제시 및 공공 영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박광무, 2013).

한편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적인 조건 또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김서용, 2005; 김현희, 2009; 함한희, 2009; 신용승 외, 2016; 김근식, 김서용,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문화라는 정의와 범위가 다양하며, 환경문화라는 정의가 사실상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의 산물’인 광의의 문화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인간의 정신적인 산물인 예술, 철학, 종교, 윤리 등의 협의적인 부분은 제외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화를 환경과 관련된 법·제도, 조직, 교육, 홍보 등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정책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간담회, 문헌분석 등을 통해 향상요인 및 저해요인을 도출하여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가. 수용성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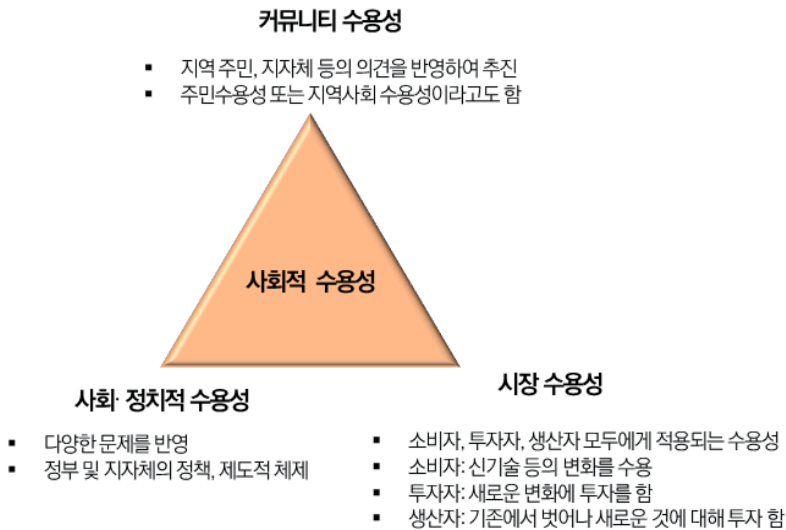
#### 1) 사회적 수용성 정의

수용성(acceptance)은 문화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학자마다 정의가 다양하다. 이에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의 내적·외적 가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정도’ 또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신윤창, 안치순, 2009). 이에 수용성의 정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정책과 기술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의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먼저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Leucht et al, (2010)은 Lucke's et al.(1998)이 ‘수용성은 주체, 대상, 특정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다차원적인 프로세스의 결과로, 개인·집단은 대상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용하지 않던 부분이 수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Lucke's et al., 1998; Leucht et al., 2010에서 재인용). Stankey and Shindler(2006)는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개인적인 경험, 조직이나 개인과의 관계, 특정 장소와 관련된 가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미학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차원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tankey and Shindler, 2006).

또한 1990년대 말부터 풍력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수용성이 적용되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EU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사회·정치적 수용성, 커뮤니티 수용성, 시장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Ellis, Geraint and Frraro, Gianluca, 20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정치적인 수용성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수행자들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 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제도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Ellis, Geraint and Frrraro, Gianluca, 2016, p.14에서 번역

〈그림 2-1〉 사회적 수용성 프레임워크

다음으로 커뮤니티 수용성의 경우 주민 수용성 또는 지역 사회 수용성이라고도 하며, 이는 시행되는 사업,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 비용, 이익 분배 등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책 수행 시기를 사전-진행-완료 후로 구분할 경우 수용성이 U 곡선으로 나타난다(문창권 외, 2016).

마지막으로 시장 수용성은 기존의 기술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생산자들, 진입하는 투자자들, 신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시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 생산자, 투자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Wustenhagen et al., 2007: 문창권 외, 2016에서 재인용).

한편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종엽(2003)은 수용성을 정책 대상이 되는 집단이 주어진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질(quality)과 내용을 얼마나 마음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나타내는 문제로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이종엽, 2003). 김근식,

이선우(2016)는 사회적 수용성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이나 사업 혹은 시설에 대한 수용 여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가진 정책 혹은 사업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 판단 등을 통해 해당 정책과 사업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김근식, 이선우, 2016).

김영곤 외(2016)는 사회적 수용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정적인 개념으로 보고 '특정 정책 혹은 기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 그들의 가치체계와 부합 하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로 정의하였다(김영곤, 고대유, 송하중, 2016).

## 2) 정책 수용성의 정의

수용성은 기술, 위험, 정치 등 다차원적인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으며(정주용, 2008), 이에 기술 수용성, 경제 수용성, 공공 수용성,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용어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책과 관련하여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추가로 살펴 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정책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김재근, 권기현, 2007).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재근, 권기현(2007) 연구에서는 허범(1982)이 제시한 '주어진 정책에 대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책과 국민 간의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을 대표적인 정책 수용성 정의로 보고 있다(김재근, 권기현, 2007).

이는 어떠한 정책에 있어 국민들이 정책 대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주체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변동의 주체로 자신의 의지와 권리를 가진 능동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한다(김재근, 권기현, 2007). 이러한 정책 수용성은 정책

을 계획, 수립, 집행하는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기능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김재근, 권기현, 2007).<sup>5)</sup> 채종현 외(2017)도 김재근, 권기현(2007), 김재근 외(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수용성의 정의를 정리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수용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채종현 외, 2017).

즉, 수용은 내면적인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포함하고(김창수, 2004), 정책 대상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정당성이 부여된 제도 및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행위자들의 수용성(degree of the acceptance)이 높아 자발적인 순응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김창수, 2004).

#### 나. 정책 수용성과 관련된 이론

정책 수용성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의지와 태도, 실제 행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적인 이론들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박희서, 2006; 박희서, 노시평, 김은희, 2007; 장재임, 추호정, 2015; 성보현, 2019; 정금희, 최윤정, 2019).

다양한 학자들이 정책 수용성은 최소 2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i. 개인의 태도, 선호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 ii. 환경 효율성, 규정 순응 비용 혹은 여러 집단 사이의 정책 비용할당 등과 같이 시행될 정책의 특성 요인이다(Steg, Dreijerink, and Abrahamse, 2006).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정책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 태도, 신념 등이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김재근, 권기현(2007),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 수용성: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pp.173-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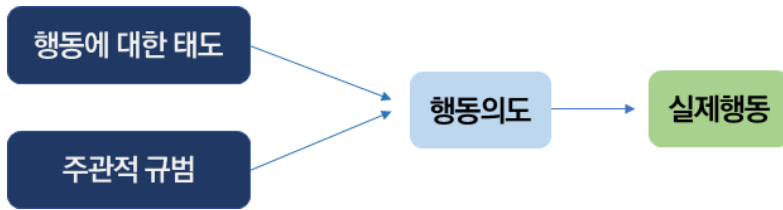
### 1)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동이론은 Fishbein and Ajzen이 1975년에 제안한 것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와 주관적인 규범(subjective norm)이 인간의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본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며, 합리적이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박찬봉, 2019). 즉, 인간의 행동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통제하에 형성된 태도(개인적인 요인)와 사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동기인 주관적 규범(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박찬봉, 20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는 행동에 대하여 그 사람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응하도록 학습된 요인을 의미한다(김명소, 한영석, 2001; 박희서, 노시평, 김은희, 2007). 이러한 태도는 행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 변인들에 대한 신념의 정도와 그 변인들에 대한 평가 정도의 총합으로 구성된다(박종민, 박진홍, 2015). 즉, 행동에 대한 태도는 실행한 결과에 대해 가지게 되는 다양한 신념과 그 신념들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김현제, 박찬국, 2012).

다음으로 주관적인 규범(subjective norm)은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신념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한 사람들을 따르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를 의미하며, (김현제, 박찬국, 2012), 행동에 대한 주위의 태도로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따를 것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란 ‘주어진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는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박희서, 노시평, 김은희, 2007; 박종민, 박진홍, 2015).

다만 합리적 행동이론은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으며(박희서, 2006),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의 계획된 행동이론이 제시되었다.



자료: 김현제, 박찬국(2012), p.18에서 번역

〈그림 2-2〉 합리적 행동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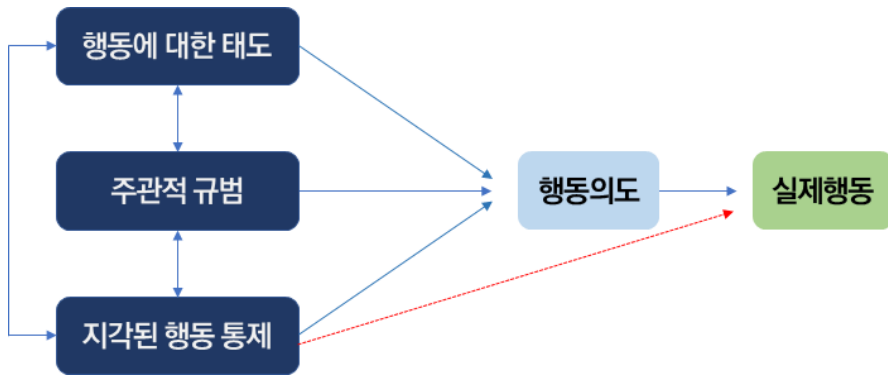
## 2)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이론은 초기 합리적 행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한 이론으로, 1985년 Icek Ajzen에 의해 제안되었다(박희서, 2006). 이는 태도가 행위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이론으로, 모델을 제시한 Aizen(1975)은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 및 성향 이외에 다른 상황적인 요인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보았다(박희서, 2006).

Ajzen(1985)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추가하였다. 이는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행하는 데 있어 실제로 얼마나 용이한지 혹은 어려운지에 대해 행동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지각 정도를 의미하며(박종민, 박진홍, 2015), 상황과 행동에 따라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가 다르게 지각된다는 것이다(문일봉, 2017). 이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의 존재 및 인지된 권한에 관한 신념을 의미하는 통제적 신념(control beliefs)과 특정 행위의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원 및 기회 등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는 지각된 지원(perceived facilitation)으로 결정된다(박시한, 한미정, 2007).

예를 들면 행동에 대한 태도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면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행동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환경정책 전문가(교수, 연구자 등)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면 환경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이 믿는 것으로 규범적 신념을 의미

한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TPB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행동에 적용되었고 많은 연구들이 이 이론들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자료: 김현제, 박찬국(2012), p.19에서 번역

〈그림 2-3〉 계획된 행동이론

#### 다. 환경정책에서 정책 수용성의 중요성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동식물 및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공유지이며, 국민 개개인의 의지와 참여 없이는 보존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하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환경 분야에서도 정책 수용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노력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환경문제의 특성 및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 1) 환경문제의 특성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현안 과제인 상황에서 국가별, 지역별, 집단별로 자연조건, 역사 및 문화, 정치·경제적인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정규호, 2003). 이는 환경문제가 가져올 위기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환경문제의 내재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지구적인 사고와 지역적인 실천을 상호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정규호, 2003). 이러한 환경문제의 특성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Dryzek(1987)은 환경문제가 가진 특성으로 복잡성, 감축불가능성, 시·공간적 가변성, 불확실성, 집합적인 특성, 자발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Dryzek, 1987; 정희성, 변병설, 2003에서 재인용).

먼저 환경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선택해야 하므로 다른 정책에 비해 복잡성(complexity)이 주요 특성이다. 이에 인과관계의 규명이 어려워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대책 방안에 대한 영향도 평가가 어렵다. 다음으로 감축불가능성(non-reducible)<sup>6)</sup>은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볼 수 없다는 특성으로, 생태계의 상호 침투성(interpenetration)과 우발적 특성(emergent properties)에서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는 통합적이고 동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정희성, 변병설, 2003).

많은 행위자들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합적 행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에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집합적 행위에는 공유재의 비극(하천 자정능력, 지하수대의 생산적인 이용 및 생태계 전체의 수용용량 등)과 공공재 과소공급(대기의 질, 생물종 다양성 등)의 문제가 있다.

6) 감축불가능성, 환원불가능성, 예측불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의 특성을 정리하기 위해 주로 참고하였던 정희성, 변병설(2003), 「환경정책의 이해」에서 표현하고 있는 감축불가능성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2)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위와 같은 환경문제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정책에는 오염자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이 있는데 사회 구조가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 등이 증가함에 따라 협력의 원칙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협력의 원칙’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정책의 목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 거버넌스가 중요하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이 외에 환경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가치지향성으로 본 학자도 있는데, 이는 사회규제정책으로서의 환경정책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하며 개발과 보전, 효율과 형평 등과 같은 가치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시경, 201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화와 도시화 및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90년대 이후 대두되기 시작하였고(구승희, 2004), 급격한 다원주의화 및 민주화 과정에서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둘러싸고 혼란을 경험했다(김창수, 2006).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책참여자 간에 가치갈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정책에 대한 가치에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나타났으며, 정권 교체로 인해 정치체제의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환경정책의 과정 및 내용이 달라졌다(이시경, 2014).

정리하면 환경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와 관련하여 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및 중앙정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한다는 점, 가치의 문제가 개입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환경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김재신, 2013).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축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존과 지역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 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수용성

앞서 수용성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정책 수용과 관련된 이론 및 환경문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수용성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주어진 정책에 대하여 받아들일지, 거부할지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또한 수용성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태도, 행동, 행동에 대한 의도 및 실제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 친환경적인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에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 의도 및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태도, 인식,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3. 수용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한 시기부터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별, 지역별, 사례별로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환경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용적인 학문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환경정책 수용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문헌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3장에서 살펴볼 수용성 요인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가.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국외 선행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2007)는 원자력의 지질학적인 처리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술적, 구조적, 절차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요인으로는 해당 입지, 설계, 안전성 평가가 주민과 정치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선정의 경우 자연장벽 및 수송, 설계 단계에서의 깊이 및 모니터링, 안전성 평가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 불확실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지와 평가, 기술적 전문가들 간의 일치되는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적 요인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과 책임감, 조직적 합법성, 학습, 지원, 입지선정 기준,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과 책임감으로는 지방정부가 가진 거부권(Veto power)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거부권은 유일한 영향력은 아니더라도 권력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가, 지역 사회가 얼마만큼의 권력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 등의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의 경우 건설, 운영 및 폐쇄 기간 동안 현장에서 대응 가능한 관리 존재를 유지하고 감사(audit)와 통제(control)를 하는 집단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의 생성도 정책 수용성의 영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절차적 요인은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해 사용된 의사결정 과정의 특성이 주민과 정치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는 공공참여 가능성, 인센티브, 실질적인 혜택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가 언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결정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지,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가 정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상에 있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을 지역과 받게 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만들어져야 함이 제시되었다.

넷째, 행동적 요인의 경우 사회적·문화적·행동적 환경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것은 주민들의 배경(backgrounds), 가치(values), 역사(history), 경험(experience)에 도움이 되고 기관, 전문가, 주민 및 모든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 있는 행동과 결정, 가치와 관심에 대한 존중, 기술적인 역량의 인식 등의 요인들이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4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국가별 폐기물 처리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정리한 것이 <표 2-2>이다.

〈표 2-2〉 국가별 폐기물 처리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가	폐기물 처리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기술적	구조적	절차적	행동적
캐나다	· 모니터링 · 지식 통합	· 펀드 설립 · 규제와 감독	· 시민과 전문가들의 협동 개발 과정	· 전문가와 시민들의 대화와 참여
독일	· 입지선정 비교	· 정책 입안자 책임성 · 규제자 정당성 · 정부편당	· NGOs 태도 · 정치적 노선	· 개방성 · 투명성
일본	· 유연성	· 국가·지역 정부들 간 권력배분	· 공공 참여	· 정보공개에 위한 행동규칙
스웨덴	· 기술적 타당성에 대 한 전문가들의 공감 대 형성 정도	· 독립적 규제자, 재정 시스템 체제 · 규제 안전 요구사항 을 충족시킨 입지선 정 과정	· 투명성 · 명확성 · 예측 가능성 · 대중에게 정보제공 · 펀딩 시스템	· 실행자의 신뢰성 · 사업 전 규제자의 감 독, 안전성 검토, 역 량 구축
영국	· 기술 정확성, 견고 함, 안전성	· 폐기물 생산자의 직 접적인 관리 · 문제점을 일반인들에 게 공개	· 이해당사자의 토론	· 공개 토론 · 모든 정보에 대한 자 유로운 접근
미국	· 기술적인 요구사 항에 대한 고려	· 정부 간 권력 배분 · 법적·제도적 기반	· 공공 의견을 반영한 체제 구축 · 공개회의 개최	-

자료: IAEA(2007),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토대로 요약정리하여 저자가 표로 구성함. 본문 pp.10~17.

Wan, Shen and Choi(2017)은 도시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에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 정치적 제휴(political affiliation), 참여 절차(participatory process), 정책 선호도(policy preference)가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Wan, Shen and Choi, 20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 신뢰는 사람들의 기대와 일치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환경정책을 지지하는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대중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법을 준수하고, 정부의 공약을 지지하며, 정치적인 리더십을 따른다(Wan, Shen and Choi, 2017). 이와

관련하여 Harring and Jagers(2013), Kollmann and Reichl(2015) 등은 환경세(environmental taxes)를 지지하는 개인의 결정에 정치적 신뢰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정부가 환경세 수입을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대중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정부가 환경적인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이다(Wan, Shen and Choi, 2017).

다음으로 절차적·분배적 공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들은 환경오염에 대해 그들의 행동을 변화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책임감 또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지지는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지된 정의(perceived justice)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에 대해 Kim et al.(2013)은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미국 뉴저지와 영국 런던에서의 환경세, 도로세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였다(Wan, Shen and Choi, 2017). 또한 Ohnuma et al.(2005)도 일본 나고야에서 재활용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이 절차적·분배적 정의에 의해 높아졌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제시한다(Wan, Shen and Choi, 2017).

마지막으로 참여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공고, 공청회, 서면의견, 제안 박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참여 메커니즘은 소수의 대중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초래한다(Wan, Shen and Choi, 2017).

이에 많은 학자들이 상향식(bottom-up) 참여 절차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에 대중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i. 대중이 정책결정 과정 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ii. 우려되는 정책 이슈에 대해 광범위한 견해를 예측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하며, iii. 환경문제에 대해 유효한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과 제시된 가치, 제안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되어야 하며, iv.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가치와 비전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중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참여 절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Wan, Shen and Choi, 2017).

Jobert, Laborgne, Mimler(2007)은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풍력에너지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먼저 영토·영역(territorial) 측면에서 입지선정에 관련된 요인(바람의 유무, 환경적 제약이 없는 조건 등)들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외에 시각적인 영향(visual impact), 입지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이전 시설에 대한 활용(former utilisation) 가능성 등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Arthur Jobert et al., 2007).

다음으로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수용성의 영향을 높이는 요인들은 개발자의 지역 통합(local integration of the developer)으로, 이는 근접성,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지식, 지역 당국 및 언론과의 접촉, 주변 지역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능력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은 개발자가 지역을 위한 발전이 아닌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외부인으로 인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성공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주요 행위자들의 관심을 고려하고 그들을 프로젝트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보호연합(bird-protection association)은 근처 서식지에 풍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참여하고, 지역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터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이익 등이 지역으로 오게 한다. 또한 계획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독일 Rheinland-Pfalz의 경우 개발자가 지역에 대한 정보 없이 지역 내에 2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였고, 이는 주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외에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의 투명성 등이 정책의 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Dore and Lebel(2010)은 2000년 세계 댐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가 의사결정 과정의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댐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모니터링 및 해체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기준 및 지침을 만들고자 제시했던 보고서에서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웠던 수용성 획득(GPA: Gaining Public Acceptance)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정치와 권력, 책임성과 합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를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나아가 수용성 획득을 위해 이상적인(ideal) 상태와 사회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EU CECILIA(2013)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현재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i. 사람들의 특성, ii. 제안된 정책의 특성이

정책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먼저 사람들의 특성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환경문제에 관한 정책이 제안되었을 때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인식할 때 수용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대중들은 그들이 보기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또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수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본인과 이웃 그리고 환경을 위한 결과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도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받아들였으나 그것이 자신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다.

다음으로 정책의 특성 측면에서 보면 대중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정책 도구를 선호하였다(예,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책 비용의 할당, 환경부담의 배분 및 정책수입의 재배분 등이 영향력 있는 정책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된 공정성(perceived fairness)과 연결된다.

Dolinicar, Hurlimann, and Grun(2014)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물 재활용과 담수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환경적 태도, 환경적 우려, 이타주의, 도덕적 의무, 물에 대한 정보 접근을 위한 활동 수준, 물 재활용 및 담수에 대한 이전의 경험 여부, 물 보존에 대한 태도, 지식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물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물 재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물 제한에 대한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 등이 있었고, 담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담수 사용 경험이 있고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수와 물재활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대체 수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중을 위한 정보가 기반이 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잘 설계된 공공 캠페인 등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 나.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국내 선행연구

국내에서도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주로 쓰레기 매립지, 방폐장,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윤인진 외(2007)는 쓰레기 매립지와와의 거리에 따른 주민들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 주민참여, 위해성에 대한 인지, 보상, 공공성 인식 및 사회적 책임, 전문가 신뢰성이라는 6개의 상위 요인에 대해 각각 하위 요인들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선정 과정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보상의 효과가 지역 수용성을 높였으며,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 경우에는 위해도 결과에 대한 공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정도가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지범(2010)은 방폐장 입지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 우리나라 경주와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방폐장 입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보상을 통한 형평성 문제, 개방적 절차를 통한 자발성, 적절한 수준의 경쟁 활용, 주민 친숙성을 고려한 위험소통정책이었다. 이 중 주민 친숙성을 고려한 위험소통정책이란 대중이 위험지각의 특성을 인지할 때 위험에 대한 생소함과 두려움이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광우병 시위 당시 실제 광우병 사례가 없었음에도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산된 것이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경쟁은 지역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절차적인 오류에 근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상훈, 윤성권(2015)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 풍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문헌조사, 담론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 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신뢰로 제시하였다. 여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절차의 공정성, 토론과 협의, 투명한 절차 등이 제시되었다.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는 각각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신뢰와 관련해서는 주민과 사업자, 인허가 당국 간의 소통 증진이 필요함을 제시하면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협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김영곤 외(2016)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국민과 정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개발과 정보공개 시스템의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원자력 등과 같은 기술은 사회적인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이해도가 정부와 전문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혹은 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김은성(2018)은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한 담론 수집, 7개 지역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각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이 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감각적 요인은 풍력발전기의 시각적·청각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미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적 요인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믿음과 가치 등으로 전통적 가치관, 생태적 가치관, 이기적 가치관 등이 해당되며, 전통적인 가치관의 경우 풍수적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악지역에 건설되는 발전기가 산의 능선에 건설되는데 풍수사상에 의하면 산 능선이 정기가 흐르는 용맥에 해당되는 곳으로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산 정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외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생태적 가치관, 흔히 남비주의라는 이기적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제도적 요인으로 절차적 정의로서의 주민참여와 지역발전기금, 전기료 감면 및 지분공유 등의 다양한 유형의 풍력에너지 수익에 대한 분배적 정의 등이 해당된다(김은성, 2018).

#### 다. 수용성 요인 선행연구 정리

앞서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온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례별로 다양한 수용성 요인이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요인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참여 절차,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등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조금, 인센티브 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 감각적·문화적 요인으로는 정부, 전문가 등에 대한 신뢰, 인지된 정의,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등이 제시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례별 수용성 요인을 <표 2-3>에 정리하였다.

<표 2-3>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례별 수용성 요인

해당 사례	수용성 요인
원자력 지질학적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요인</li> <li>·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li> <li>· 지역 정부에게 부여하는 권한과 책임감</li> <li>· 의사결정 과정</li> <li>· 인센티브</li> <li>· 주민들의 가치관 및 경험</li> <li>·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치와 관심에 대한 정부/사업자 등의 존중</li> <li>·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li> </ul>
도시환경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 대한 믿음</li> <li>· 인지된 정의(perceived justice)</li> <li>· bottom-up 방식의 참여절차</li> </ul>
풍력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요인</li> <li>· 개발자의 지역 주민들과의 통합</li> <li>·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계획수립 절차</li> <li>·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li> <li>· 사업의 투명성</li> </ul>
온실가스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들의 관심</li> <li>· 정책을 제안한 기관에 대한 신뢰</li> <li>· 정책 결과에 대한 대중들의 믿음</li> <li>· 보조금</li> </ul>
물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li> <li>· 정책과 관련한 경험</li> <li>· 주변 사람들의 의견</li> </ul>
쓰레기 매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에 대한 신뢰</li> <li>· 보상</li> <li>·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li> <li>· 위해도 등의 결과에 대한 공개</li> </ul>

〈표 2-3〉의 계속

해당 사례	수용성 요인
방사성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인 보상</li> <li>· 필요성에 대한 인식</li> <li>· 부정적인 인식이나 지역의 이미지 훼손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li> <li>· 지원금/보상금 강화</li> <li>· 지역의 경제성장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통계 등)제공</li> <li>· 사업자-주민 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도</li> <li>· 주민참여의 보장</li> </ul>
방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인 보상</li> <li>· 개방적인 절차</li> <li>· 대중들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점 등</li> </ul>
풍력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정보제공</li> <li>· 투명하고 참여가 가능한 절차(예: 토론과 협의 등)</li> <li>· 주민-사업자-지자체 간의 소통 증진</li> <li>· 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li> </ul>
원자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전문가에 대한 신뢰</li> <li>· 정보공개 시스템의 고도화</li> <li>·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li> <li>· 사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방안</li> </ul>
풍력발전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인 혜택</li> <li>· 주민참여 절차</li> <li>· 입지요인</li> <li>· 지역 주민들의 가치관</li> </ul>

자료: 저자 작성.

## 제3장

### 수용성 요인 분석

정부의 정책은 문제의 인식 및 정의, 계획, 실행, 분석,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있어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인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마다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수용성 요인들을 묶어 정리함으로써 향후 환경문화의 유형 구분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용성 요인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사례분석에 대해서는 신문기사,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통해 정책 시행의 배경과 목적, 수용성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수용성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의 수용성과 관련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에서 도출되는 수용성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2장의 문헌분석과 본 장에서의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분석한 수용성 요인들을 유사한 특징을 가진 요인끼리 묶는 그룹핑 작업을 통해 향후 4장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수용성 요인 향상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본 절에서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문화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용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선정된 사례에 대해 해당 정책과 관련 되어 있는 신문기사, 보도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정책의 배경과 목적, 수용성 현황 등에 대해 정리한 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성 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질적 연구표집 유형 중 ‘눈덩이 굴리기 표집 방식(snowball sampling)’을 통해 사례를 추가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표집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연구에 이미 선정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게 요청하는 것으로(Onwuegbuzie and Leech, 2007), 사례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사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이 미흡한 경우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권향원, 김성민, 한수정, 2017).

이는 분석 과정에서 처음 선택된 제보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지식, 경험 등이 있는 개인을 소개받아 표본을 키우는 방식이다(홍영혜, 조명옥, 태영숙, 2005).

이에 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장에서 해당 정책들과 관련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을 공유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례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사례들에 대하여 신문기사, 보도자료,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수용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3-1>은 수용성 요인 도출을 위해 분석한 사례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 수용성 요인 도출을 위한 사례분석 목록

구분	해당 정책
일반정책	·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일반정책	· 도로명주소
환경정책	· 빈 용기 보증금제도
환경정책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정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환경정책	· 쓰레기 불법소각

자료: 저자 작성.

### 가. [사례1]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 1)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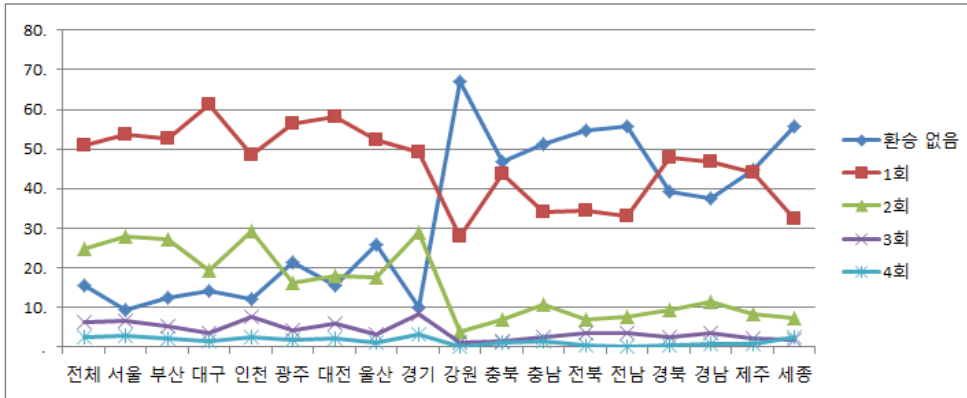
1990년대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만 대가 넘어 가면서 도시 내 교통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버스승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00년대 초 전반적인 버스산업이 침체기였으나 버스요금의 경우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규제대상이었고,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근로자 확보난, 서비스 수준의 하락, 운송수지 적자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이상민, 임정실, 2013).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대도시권의 버스 준공영제 실시 및 전용차로 확충, 통합요금제 등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개편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용수요가 증가 추세로 바뀌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이상민, 임정실, 문정욱, 2012).

특히 요금체계와 관련하여 경기도, 인천시 등이 수도권에서 통합거리비례요금제를 근간으로 하여 여러 수단을 하나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요금을 부과하는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수도권의 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 횟수(최대 4번)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체계로 하루 2,000만 건의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운영기관이 전체 수입금이 연간 7조 원의 시장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신성일, 2015).

## 2) 제도의 수용성 현황

2018년 기준으로 시도별 대중교통 환승 횟수에 대한 현황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는 환승을 1회 이상한 횟수가 절반 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대중교통현황조사” 데이터 활용. 저자 작성.

〈그림 3-1〉 시도별 대중교통 환승 횟수 현황(2018년 기준)

지역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이용률이 82.8%를 나타내며,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6,000만 명을 넘었다. 이는 버스 증차,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축, 비가림정류장 확대 등의 인프라 확대와 함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와의 요금단일화 시스템 등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sup>7)</sup> 경산시의 경우 대중교통 무료환승제를 2009년부터 시행하였고 2015년 기준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이 95%를 나타내고 있으며,<sup>8)</sup> 인천시는 2009년에 통합환승할인제도를 도입된 지 만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5% 증가하였고, 전체 이용객 중 95%가 교통버스카드를 이용하여 환승 할인을 받고 있다.<sup>9)</sup> 경기도의 경우 대중교통 분담률<sup>10)</sup>이 2006년 34.8% (버스 27%,

7) 국민일보(2019.1.28), “제주, 대중교통 이용객 2000년대 들어 처음 ‘6000만명’ 돌파”, 검색일: 2019.9.4.

8) 대구신문(2016.1.19), “경산 시내버스 무료환승 7년...시민부담 350억 감소, 이용객 30% 증가”, 검색일: 2019.9.4.

9) 기호일보(2012.11.12), “‘통합환승’의 힘...인천 대중교통 이용객 5% 증가”, 검색일: 2019.8.26.

10) 교통수단분담률이란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버스,

전철과 철도 7.8%)에서 2015년에 38.5%(버스 28.1%, 전철과 철도 10.4%)로 향상되었으며, 경기와 서울 간의 대중교통 분담률도 2006년 43.4%에서 2015년 51.8%로 증가하였다.<sup>11)</sup> 이는 통합환승할인제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 3) 수용성 요인 분석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경우 환승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에 대해 지자체의 보전금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고, 통합요금제도로 인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이 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수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이 높은 사례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인 편리성이다. 통합환승할인제도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인 편리성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2000년대 초에는 버스업체 간 수익성 높은 노선에 대한 경쟁, 경주식 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의 서비스 질은 악화되어 가는 반면 요금인상이 있었고, 더불어 승용차의 사용이 급증되는 상황이었다.<sup>12)</sup> 이에 대중교통의 장점 및 중요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환승할인이라는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하여 교통이용요금이 절감됨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되었고, 점차 대중교통이용률이 증대되었다.

다음으로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이다. 대중교통체계의 요금체계가 개편되기 이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요금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즉,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우 마을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지하철을 타야 해서 요금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했는데, 이는 대부분이 사회 빈곤층들에 해당되어 소득재분배에 맞지 않았다(김경철, 2004).<sup>13)</sup> 이에 요금개편이 일어난 후 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버스

---

지하철·철도, 택시, 기타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총 통행량에서 각 수단별 분담률을 산출하며, 이때 도보, 자전거는 포함하지 않는다(서울특별시 교통정보, “대중교통분담률”, 검색일: 2019.10.6.)

11) 의정부뉴스(2017.2.27), “경기도 수도권 통합환승제 도입 10년 ... 5조원 혜택”, 검색일: 2019.8.26.

12) 서울정책아카이브 홈페이지〈서울주요정책〉교통분야). 검색일: 2019.10.6.

13) 김경철(2004),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당면과제」, 서울경제브리프 32호. 서울연구원.



는 균일제, 지하철은 거리비례제로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 4) 해당 사례에 대한 시사점

이 제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운송원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운영 손실 비용이 발생하였고, 줄어든 교통비를 세금으로 업체에 보전해주는 손실금 부담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와 운송기관 간에 갈등이 증폭되었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수용성은 높아졌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와 지자체들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국가 경쟁력 등과 연결되기에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되기에 중요하다. 이에 해당 사례는 정책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인 경제적 부담 감소, 편리성 증대 등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넓은 관점에서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나. [사례2] 도로명주소

#### 1) 사례 개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거리·도로 중심의 주소를 사용해 왔으나 일제 강점기 근대적 토지제도의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토지수탈과 조세징수 등의 목적으로 지번주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안용준, 지남석, 2018).<sup>14)</sup>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인해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었고, 주소체계의 복잡화로 물류유통,

14) 안용준, 지남석(2018),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배달, 방문 등의 물류비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의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과 건물에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되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2007년 「도로명주소법」 제정 및 시행, 2011년 법정 주소로 사용,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였다(황보상원, 2017, 안용준, 지남석, 2018).

도로명주소의 도입은 주소체계의 정비로 인한 길 찾기의 편리성 증대, 응급구조 현장에서의 대응력 향상,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라는 효과를 예상하고 시행되었다(안용준, 지남석, 2018).

## 2) 제도의 수용성 현황

2011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를 법정 주소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인지도는 낮고,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김준현, 권기욱, 2011).<sup>15)</sup> 이에 도로명주소의 현황, 문제점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과제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김준현, 권기욱, 2011); 옥진아, 2016; 서울연구원, 2017; 황보상원, 2017; 안용준, 지남석,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로명주소의 수용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시민의 23.8%는 거주지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49.3%가 도로명주소에 불만족하고 있었다(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2017). 경기도민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76.8%)이나 표기법(75.2%)에 대해서는 대충 알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56.1%였다(옥진아, 2016).

## 3) 수용성 요인 분석

도로명주소의 경우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며 어려운 주소체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용성 요인이 낮은 정책으

15) 김준현, 권기욱(2011). “새주소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활성화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 13(1), pp.31-42.

로 판단하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 시행 이전 사전 연구 작업의 부재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적으로 이어진 도로에 건물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공간적인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지번주소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이러한 주소체계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황보상원, 2017; 옥진아, 2016). 또한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주소의 경우 길이 없는 곳에서는 건물의 위치 지정이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많으며 단지 내에서는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김선일, 허용훈, 2015).<sup>16)</sup>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한 것이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의견수렴 과정의 부재이다(황보상원, 2017).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 대상이 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없었고 이에 국민들은 정책 효과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더욱이 국민들은 지번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이 없어 사용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였다(김태승, 권혁신, 2015).

끝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수용성 저하 요인으로 나타났다(옥진아, 2016).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는 시행하였으나 새 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핵심 기능인 위치 찾기 및 경로 찾기 기능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어렵고, 실생활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김선일, 허용훈, 2015).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찾거나 거주 지역 내의 많은 도로명을 외운 다음 구체적인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을 배우고 나서야 제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16) 김선일, 허용훈(2015), “우리나라 도로명주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p.539-555.

#### 4) 해당 사례에 대한 시사점

도로명주소는 편리성 증대,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예측되었기에 정부, 지자체 등에서는 정책의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하였으나 결과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국민의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저조한 수용성을 나타냈다. 이는 정책의 목적, 효과 등이 타당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이 정책의 필요성 인지, 실생활에서의 편리성, 집단별 수준을 고려한 홍보와 교육 등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주소체계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며, 약 100여 년을 사용했기에 새로운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수용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해야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문헌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사례들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홍보와 교육 등이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다. [사례3] 빈용기 보증금제도

#### 1) 사례 개요

우리나라는 1985년 국세청 고시로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한 뒤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들이 보증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 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sup>17)</sup> 빈병을 재사용하게 될 경우 소나무 3,300만 그루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 또는 국민 1만 5,000명이 연간 사용하는 전기량 절감효과와 동일하다.<sup>18)</sup> 또한 빈병의 재사용을 늘리

17)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홈페이지, “빈용기 보증금제도”, 검색일: 2019.8.12.

18) 환경부 홈페이지, “빈용기 보증금제도”, 검색일: 2019.8.12.

면 병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을 줄임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보호할 수 있다.<sup>19)</sup> 이는 ‘공병보증금제도’를 모태로 하며 초기에 산업 측면에서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로 통합·이관되면서 2003년부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김용근, 황기인, 2013).

한편 많은 선진국에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유럽 13개 국가, 북미 2개 국가, 아시아 4개 국가, 오세아니아 3개 국가로 총 22개 국가에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현경, 2017).

## 2) 제도의 수용성 현황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수용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연간 약 53억 병이 출고되고 그중 50억 병이 회수됨에 따라 약 95%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나<sup>20)</sup> 소비자의 반환이 비활성화되어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sup>21)</sup> 특히 업소의 경우 약 31.6억 병이 출고되어 전량 회수가 되는 반면 가정에서는 17.8억 병이 출고되어 4.3억 병만이 소매점으로 반환되고 있다.

〈표 3-2〉를 보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빈용기 회수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재사용 횟수 및 재사용률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국가별 빈용기 회수율 및 재사용 횟수, 재사용률

구분	한국	일본	캐나다	독일	핀란드
회수율	95%	98%	98%	98%	99.5%
재사용 횟수	8회	28회	15-20회	40회 이상	30회
재사용률	85%	94%	96%	95%	98.5%

자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사업실, 2016, p.27.

19)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홈페이지.

20)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사업실(2016).

21)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사업실(2016).

우리나라의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약 20여 년간 동결된 보증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 소비자 반환체계의 어려움 등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2)</sup>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되어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 인상된 보증금<sup>23)</sup>을 적용하고 있으며, 빈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 도입, 소비자 반환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소비자 신고보상금제<sup>24)</sup>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용기를 받아야 하는 업주들(소매점, 도매점 등), 낮은 보증금액 및 반환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수용성 요인 분석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경우 빈용기를 회수해야 하는 사업장(소매점)과 빈용기를 반납하는 소비자(일반 국민)가 정책 대상이며, 개인의 인식 및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사례에 해당된다. 제도의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소매점) 입장에서 낮은 효율성이다.<sup>25)26)27)</sup> 대부분의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가져오는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적재 공간이 부족하며, 받은 병을 정리하고 반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비용 대비 취급수수료가 낮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무인회수기는 전국 총 53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점포수인 3,500여 개와 비교할 때 약 2%의 설치율을 보인다. 이러한 사업장의 부정적인 인식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더 낮게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스의 경우 지역 내에 용기를 반환하는 반환센터에 반납된 빈용기를 모으는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은 면허사업자가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재사용병과 재활용병을 구분하여 분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환경부, 2016).

22)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사업실(2016).

23) 2017. 1. 1부터 신병 제조원가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와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함.

24) '신고보상제'는 소매점에서 부당하게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최대 5만 원), 해당 소매점에는 기존 규정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제도(환경부 보도자료, 2017.2.6, 검색일: 2019.8.29).

25) 뉴스컬처(2018.9.14), “‘소비자리포트’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허와 실...빈병은 어디로”, 검색일: 2019. 8.30.

26) 세계일보(2019.4.1), “‘몇 백원이 뭐라고’... 빈병 보증금은 ‘못 먹는 떡’?”, 검색일: 2019. 8.28.

27) 주간동아(2017.10.17), “편의점주 올리는 ‘빈병보증금’”, 검색일: 2019. 8.28.

둘째, 빈용기 반환에 대한 부정적인 여건이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기 위해 소매점을 방문할 경우 공간의 부족, 업무 과중 및 빈병 구별에 대한 어려움 등의 이유로 빈병 수거에 난색을 표하는 업주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눈치를 보며 반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매점들의 행동은 빈병을 반환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정용 빈병 회수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이다.<sup>28)</sup> 빈용기를 반환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제도의 수용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낮은 빈용기 보증금 금액에 비해 반환 절차가 번거롭고, 이러한 과정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해당 사례에 대한 시사점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환경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임에도 국내에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부정적인 인식 등이 정책의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이들의 인식과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수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정부가 정책 시행함에 앞서 사전에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한 기업,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유인제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 라. [사례4] 재활용품 분리배출

#### 1) 사례 개요

우리나라는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증가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봉투 속의 70%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자원들임에도 많은 양의 자원들이 소각, 매립되고 있다. 이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연간 약 5억 매의 종량제 봉투 절약과 약 3,000억 원

28) 전북일보(2017.7.20), “빈병 보증금제도, 소비자 인식개선 절실”, 전북여성소비자연합 토론회. 검색일: 2019. 8.28.

상당의 종량제 봉투 구매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원 재활용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에 대한 세분화가 요구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방법,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환경부, 2018b).

한편 작년 3월 수도권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폐비닐 등 일부 품목들에 대해 수거 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수거되어 선별장으로 가는 폐비닐을 포함한 혼합플라스틱의 40% 이상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재활용 비닐류 등의 가격이 하락했고, 그동안 이물질이 묻은 비닐 등도 함께 수거한 뒤 분리 작업하여 처리해오던 국내 수거업체들이 비용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수거를 거부한 것이다.<sup>29)30)</sup>

실제로 1일 150톤 정도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약 30%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쓰레기들을 업체가 다시 폐기하기 위해서는 연간 5억~6억 원의 비용이 소모됨과 동시에 음식물 찌꺼기 등의 잔여물 세척으로 인해 1일 40톤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이에 정부는 같은 해 정부 합동으로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분리배출 방법의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이 잘될 수 있는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제시, 페이스북을 통한 국민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 의견 수렴, 시민단체와 전문가, 재활용업계, 생산자업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기준 개선 포럼’ 등을 운영하였다.<sup>32)</sup>

나아가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 교육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배출

29) 김포미래신문(2016.4.8), “재활용업체 이물질 묻은 비닐 등 수거 거부 ‘주민 혼란’”, 검색일: 2019.8.30.

30) 한국일보(2018.4.5), “형형색색 페트병에 이물질 라벨까지 붙이니...재활용 1등급은 0.1%뿐”, 검색일: 2019.8.30.

31) CJ 헬로 지역방송(2018.4.12), “[전국 쓰레기 대란]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정책 개선 우선?”, 검색일: 2019.8.30.

32) 환경부 보도자료(2018.5.18),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검색일: 2019.10.2.



이 어려운 지역에 동네마다 12개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실시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sup>33)</sup>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재활용도움센터에 캔과 페트병류를 배출하면 현장에서 압축 후 재활용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처리 과정의 단축으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 수거차량 운전원 및 선별장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sup>34)</sup> 이 외에 서울시 금천구의 경우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여 ‘도시광부’ 혹은 ‘자원관리사’라는 이름의 관리인이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sup>35)36)</sup> 현재 금천구 독산 4동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의 이물질은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sup>37)</sup>

## 2) 제도의 수용성 현황

환경부(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분리배출에 유입된 재활용 중 이물질이 섞여 있어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비율이 38.8%에 이르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에 반입된 분리배출품 중 순수하게 재활용 시설로 재투입된 수량은 전체의 약 46.5%를 차지한다. 특히 선별 후에 발생한 협잡물이 약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분리배출품에 있는 이물질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정호규, 남영숙, 2018).

〈표 3-3〉 재활용품 선별 및 활용(2017년 지자체 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구분	전체 반입량	재활용 선별품	에너지화물	협잡물	기타(보관량)
수량(천 톤)	863	401	123	306	33
비중(%)	-	46.5	14.3	35.5	3.8

자료: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보조사업 소개 자료: 정호규, 남영숙, 2018, p.33에서 재인용

33) 공정한 언론 타파인(2019.7.24), “‘쓰레기는 자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범도시 남원”. 검색일: 2019.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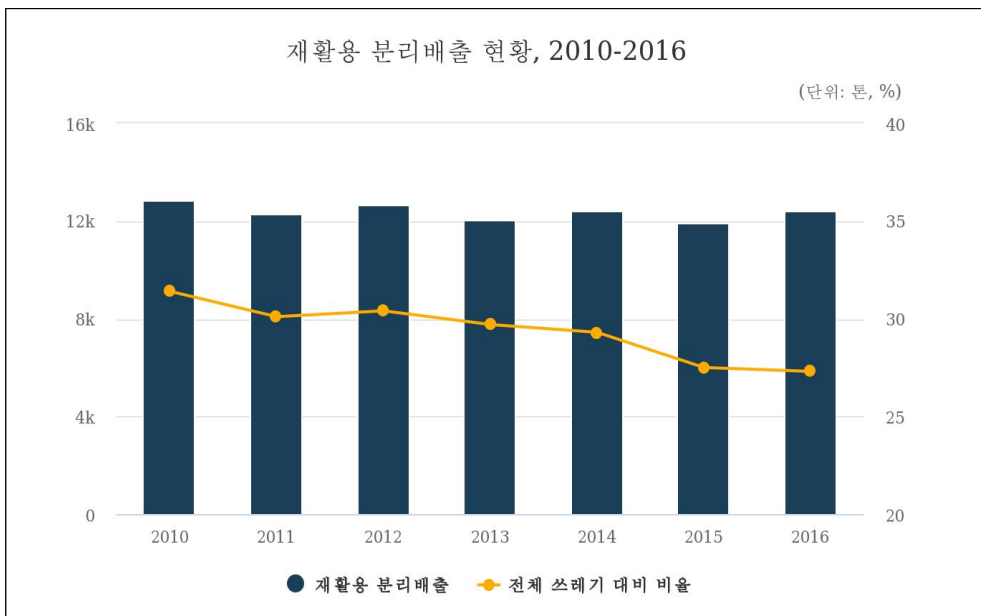
34) 제민일보(2019.8.7), “서귀포 재활용 처리 시스템 개선 효과 ‘톡톡’”. 검색일: 2019.8.30.

35) 한강타임즈(2017.12.5), “금천구, 재활용정거장 확대 운영 실시”. 검색일: 2019.8.30.

36) 서울 public news(2017.12.5), “금천구, ‘재활용 정거장’ 빌라촌 구석구석까지”. 검색일: 2019.8.12.

37) 분리배출 잡학사전, “분리배출 우수사례 ‘재활용 정거장’”, 검색일: 2019.10.30.

정호규, 남영숙(2017)의 연구에서 분리배출 지자체 및 민간 재활용품 선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면의견조사를 최근 2년(16~17) 간 진행한 결과 분리배출 실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최종 처리 폐기물은 10~60%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에는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이나 오물 등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질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물질 제거하지 않아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정호규, 남영숙, 2017).



자료: 숫자로 보는 인권 홈페이지 통계자료,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 검색일: 2020.1.2.

〈그림 3-2〉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2010~2016년)

### 3) 수용성 요인 분석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제도는 전반적으로 수용성이 낮은 사례로 국민들의 인식,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 민·관 협력과 책임성의 부재 등이 제도의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먼저 분리배출에 대한 낮은 국민의식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정된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다.<sup>38)</sup>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더라도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구겨 넣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선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중에게 분리배출 단계에 대한 인지와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정호규, 남영숙, 2017).

예를 들어 서울시 영등포구는 2013년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하여 직접 분리배출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2014년 대비 2016년에 약 23%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9)</sup> 이는 분리배출에 있어 국민의 의식과 참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경우 ‘공공용 봉투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여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고, 구의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나아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sup>40)</sup>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이 주민들의 실천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몇몇 지자체들을 제외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러한 대응 방식이 결국 국민으로 하여금 분리배출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끝으로 민·관 협력과 책임성의 부재이다. 현재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협력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임, 정혜운(2019)은 시민,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분리배출, 재활용제품 사용 활성화 등의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정임, 정혜운, 2019).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자원순환 거버넌스 도시’를 위해 제시한 과제 중 사업체 민관협력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사업장

38) 울산저널(2016.2.4), “재활용품 분리배출 20년...시민의식 아쉬워”, 검색일: 2020.1.2.

39)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2017.4.13), “영등포구 쓰레기 23% 감량...비결은 주민참여”, 검색일: 2019.9.6.

40)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2017.4.13), “영등포구 쓰레기 23% 감량...비결은 주민참여”, 검색일: 2019.9.6.

분리배출 및 자체 처리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주체별 협력과 책임성이 분리배출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상현, 2018).

#### 4) 해당 사례에 대한 시사점

재활용품 분리배출제도는 낮은 국민의식,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 민·관 협력 및 책임성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낮은 수용성을 나타낸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임에도 대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시민, 정부, 시장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점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 ‘공공재에 대한 책임성 미흡’이 당연히 되어버린 시장과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마. [사례5] 일회용컵 사용규제 정책

#### 1) 사례 개요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플라스틱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장현숙, 2019).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기계협회(EUROMAP)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으로 132.7kg이었으며 이는 일본(65.8kg), 이탈리아(92.7kg), 독일(92.7kg), 프랑스(65.9kg) 등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EUROMAP, 2016).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10백만 톤(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5.2백만 톤, 사업장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4.4백만 톤, 건설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0.5백만 톤)이며, 이 중 5백만 톤은 재활용, 4.4백만 톤은 소각, 1백만 톤이 매립되는 양으로 분석되었다(환경부, 20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 p.7에서 재인용).

최근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2018년 8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이에 폐기물 대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환경부, 2019)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중의 하나로 레스토랑,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였고,<sup>41)</sup>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의 확산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회수의 어려움, 판매자의 책임의식 미흡, 다양한 재질 등으로 재활용률이 약 6%인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환경부, 2018a).

## 2) 제도의 수용성 현황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친환경제품들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 G마켓에서는 2018.12.3.~2019.1.2 기간에 텀플러와 머그컵의 매출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5%, 18% 증가하였으며 일회용컵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옥션(auction)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텀플러 21%, 머그컵 10%가 증가하였으며 종이컵 8%, 비닐봉지 4%, 나무젓가락 12%가 감소하였다.<sup>42)</sup>

현재 전국 1만 360곳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월별 수거량은 206톤(2018년 7월 기준)에서 58톤(2019년 4월 기준)으로 72%가 감소하였다.<sup>43)</sup> 또한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서로의 의견과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41) 우리나라는 2003년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음료컵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가 컵을 가져오면 다시 돌려주는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미환불금 보증금 사용의 부적절성 및 일회용컵 회수율의 감소 등으로 인해 2008년 폐지하였고, 이후 보증금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42) 매일경제(2019.1.9), “일회용품 규제에 착한소비 뜬다...텀플러·장바구니 매출 증가”, 검색일: 2019.9.6.

43) 매일일보(2019.8.25), “일회용품 줄이기 규제 1년, 70% 대폭 감소”. 검색일: 2019.9.6.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외에 유명한 카페 및 지방의 경우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길가에 버려지는 컵도 줄어들지 않은 만큼 제도의 시행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sup>44)</sup>

### 3) 수용성 요인 분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고, 텀블러 등 친환경제품의 구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대신 종이컵 사용 증가, 지자체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점점 미흡 등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해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성공사례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정책을 수용성이 낮은 사례로 보고 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수용성이 낮은 가장 주요 원인으로는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낮은 실효성이다.<sup>45)</sup> 이는 매장에서 유리컵을 사용하고 나갈 때 일회용컵으로 옮기거나 플라스틱 대신 다른 일회용품인 종이컵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업장들의 그릇된 대응 방법을 예상하지 못하고 제도를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사후관리이다. 일회용컵 사용금지 집중점검 기간(2018.8~2018.12) 동안 지자체별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위반 건수는 서울 17건(218만 원), 대구 8건(160만 원), 경남 7건(44만 원), 경기4건(70만 원), 부산 3건(160만 원), 광주·제주 1건(50만 원)이었으며, 그 외의 지자체는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sup>46)</sup> 이는 정책이 시행된 이후 특정 기간 이외에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용성을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비자(국민)의 인식 부족 및 편리성 추구이다.<sup>47)</sup> 국민생각함에서 ‘일회용품 사용 DOWN, 편리성 UP’이라는 주제로 (2018.6.28~2018.7.19) 참여의견 제시 및 투표결과를

44) 환경일보(2019.3.20), “그냥 일회용컵 쓰라” 카페 일회용컵 규제 7개월의 민낯. 검색일: 2019.9.6.

45) 컨슈머치(2019.7.3),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 ‘일회용품 사용, 편리함만 쫓는 일’”, 검색일: 2019.9.6.

46) 서울경제(2019.4.19), “일회용컵 단속 한다더니...10개 지자체 적발건수 '0'”. 검색일: 2019.9.6.

47) 컨슈머치(2019.7.3),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 ‘일회용품 사용, 편리함만 쫓는 일’”, 검색일: 2019.9.6.

살펴보면 총 참여 인원 119명 중 75명인 약 63%가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나아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으로는 일회용품의 편리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환경오염발생억제 효과가 우수한 대체소재 개발, 환경부담금 부과, 공익광고 시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제안되었다.<sup>48)</sup> 또한 이와 관련하여 투표한 결과 환경보호에 주로 앞장서야 하는 주체를 정부로 보았으며, 정부가 주체라면 환경보호 홍보 및 다회용품 사용 독려, 기업이 주체라면 일회용품을 대체할 제품군 연구개발, 국민이 주체라면 일회용품 대신 대체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5명 투표 참여, 이 결과에 대한 공감 101명).<sup>49)</sup> 이는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해결책이지만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등의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4) 해당 사례에 대한 시사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시행된 지 약 2년이 되지 않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정책에 대한 주체별 견해가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책 수용성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낮은 수용성 사례로 보고,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앞선 사례들과 유사하게 정책의 허점, 미흡한 사후관리 및 국민의 인식 부족과 이기심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해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개인의 이기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허점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정책의 수용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48) 국민생각함, “일회용품 사용 DOWN! 편리성 UP!”, (1차) 생각의 탄생.

49) 국민생각함, “일회용품 사용 DOWN! 편리성 UP!”, (2차) 생각의 발전.

## 바. [사례6]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 1) 사례 개요

우리나라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위반행위는 무허가 폐기물운반업의 영위, 폐기물 무허가 위탁, 불법매립, 폐기물 불법소각, 불법배척 및 불법투기 등이 있다(김성은, 김성언, 2009).<sup>50)</sup> 이 중 폐기물 불법소각은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한 연소생성물로 인한 대기질 악화 및 건강 피해 위험 증대,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증가, 소각으로 인한 화재 확산 등의 많은 위험성이 있음(김동영, 조재만, 2009 ; 황운용, 2016)<sup>51)52)</sup>에도 전국적으로 폐기물의 불법소각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4,223건 적발 → 2018년 하반기 8,998건 적발). 특히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쓰레기 재활용이 증가된 반면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증가, 재활용품 배출 시 이물질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박희서, 2006).

### 2) 제도의 수용성 현황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를 금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정, 시민수사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특히 노년층이 많은 농촌 등에서 산불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환경오염 신고 현황과 관련하여 2014~2017년까지 가장 많은 신고건수는 생활폐기물 투기 및 소각으로 7,036건이었으며 이는 대기 분야 신고건수인 1,666건과 비교했을 경우 약 4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sup>53)54)</sup>

「화재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부주의로 인한 전국 화재건수는 총 2만 352건이었으며, 그중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건수는 전국 2,729건이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50) 김성은, 김성언(2009),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7-207.

51) 김동영, 조재만(2009), 「‘악취끝 프로젝트’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경기연구원

52) 황운용(2016), “쓰레기 불법소각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87-188.

53) 「2014~2017 전국 환경오염 신고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

54) 참좋은환경(2017.10.11),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등 여전히 만연”, 검색일: 2019.9.4.



### 3) 수용성 요인 분석

쓰레기 불법소각의 경우 대기와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용성이 낮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정책을 만드는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로 인한 수용성 저하 요인, 정책을 받아들이는 주체인 국민으로 인한 수용성 저하 요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로 인한 수용성 저하 요인으로는 약한 지도단속 및 솜방망이 처벌, 열악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불법소각은 주로 이동식 CCTV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소각행위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 또한 적발되어도 계도중심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up>55)</sup>

한편 불법소각이 농촌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등의 논밭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에 대해 수거하는 지자체들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은 농촌 지역에서 고령자들의 불법소각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2017년 하반기 기준 농촌 지역 등의 불법소각 적발건수 7,140건).

다음으로 국민들로 인한 수용성 저하 요인을 살펴보면, 소각집하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 소각비용 및 쓰레기봉투 구매비용을 아끼려는 개인적인 이기심 등이다.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불법소각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특별단속, 봄철 집중단속, 농촌 지역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제공 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8년 환경부가 시행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중 불법소각 특별단속 결과는 <표 3-4>와 같다.

55) 국민일보(2019.1.18), “미세먼지 배출 위반 사업장 급증... 불법소각 1년새 2배 늘었다”, 검색일: 2019.9.4.

〈표 3-4〉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불법소각 특별점검 결과(2017년 기준)

구분	적발건수							주민계도 건수
	계	과태료 부과						
		합계		사업활동 발생		사업활동 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140	413	192,785	64	47,750	349	145,035	6,727
환경부	1	1	1,000	1	1,000	0	0	0
산림청	2,919	2	440	0	0	2	440	2,917
지자체	4,220	410	191,345	63	46,750	347	144,595	3,810
상반기	2,857	392	206,102	121	91,500	271	114,602	2,465
하반기	4,813	228	112,800	29	27,500	364	85,300	4,585

주: 사업활동 발생, 사업활동 외로 인한 생활폐기물 소각을 의미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검색일: 2019.10.7.

#### 4) 해당 사례에 대한 시사점

쓰레기 불법소각은 대기와 수질오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더불어 화재발생으로 인한 생명위험이 문제가 되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수용성 요인 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약한 지도단속, 솜방망이 처벌, 비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등의 제도적인 요인들도 주된 원인이지만 농촌 지역과 고령층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갈수록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기술 등의 발전으로 집단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의 역할과 대응 방안도 변화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수용성 요인 정리

심층사례 6개에 대해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관련 부처 보도자료, 전문가 워크숍, 연구진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수용성 요인을 크게 ‘정책을 만드는 입장’과 ‘정책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먼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문화로 정리될 수 있는 수용성 저해 요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사후관리, 홍보와 교육 부족, 협력과 책임성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로 정리될 수 있는 수용성 저해 요인으로는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개인의 이기심 및 편리성 추구 등이 도출되었다, 이에 사례별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5).

〈표 3-5〉 심층사례 분석으로 도출된 사례별 수용성 요인

해당 사례	수용성 요인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상 요인) 경제적인 편리성</li> <li>· (항상 요인) 형평성·합리성 있는 요금체계</li> </ul>
도로명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검토의 미흡</li> <li>·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 부재</li> <li>· 제도에 대한 홍보, 교육 부족</li> </ul>
빈용기 보증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입장에서의 낮은 효율성</li> <li>·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건</li> <li>·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li> </ul>
재활용품 분리배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배출에 대한 낮은 국민 의식수준</li> <li>·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li> <li>· 민·관 협력과 책임성의 부재</li> </ul>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낮은 실효성</li> <li>· 정부, 지자체의 미흡한 사후관리</li> <li>· 소비자(국민)의 인식 부족 및 편리성 추구</li> </ul>
쓰레기 불법소각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자체의 약한 지도단속 및 솜방망이 처벌</li> <li>· 쓰레기 불법소각을 증가시키게 만드는 열악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li> <li>· 소각비용 및 쓰레기봉투 비용을 아끼려는 개인적인 이기심</li> <li>· 소각집하장 방문에 대한 번거로움</li> </ul>

주: 수용성 요인에서 항상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은 저해 요인에 해당  
자료: 저자 작성.

### 3.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성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요인 분석을 위한 경험적 견해를 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간담회 대상은 지자체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청년환경운동가, 환경영향평가 실무자, 중소기업 경영자, 환경공학 전공 대학생과 행정학, 환경정책학, 물환경 분야, 대기 분야 전문가 등이었으며, 진행하였던 간담회 일시, 대상 및 논의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환경정책 수용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요

일 시	대 상	내 용
2019.4.12	지자체 시의회 관계자	· 환경사회영향평가조례, 위원회 공개 및 운영방안 개선 등
2019.5.15	환경·문화정책 교수	· 문화, 수용성 이론, 사례 등
2019.5.16	환경 전공 교수	· 해상풍력의 갈등 요인, 지역상생 및 소통계획의 부재 등
2019.5.21	청년 환경·문화운동가	· 환경정책을 청년층에서 바라보는 관점, 문제점 등
2019.5.28	환경 전공 교수	· 지자체 정책의 수용성 관련 이슈, 사례, 해결 방안 등
2019.5.29	환경 교육 교수	· 환경정책 수용성을 교육적 측면에서 높이기 위한 방안 등
2019.7.19	환경공학 전공 대학생	· 환경문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수렴 등
2019.7.31	전 서울시 공무원	· 서울시 환경정책에 대한 사례 공유, 대응 방안 등
2019.7.31	시민사회 관계자	· 환경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2019.8.7	청년 환경·문화운동가	· 환경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
2019.8.9	정책평가 전문가	·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혁신방안에 대한 강의, 논의 등
2019.8.12	환경공학 전공 대학생	· 환경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 입장에서의 방안 등
2019.8.20	중소기업 경영진	· 환경정책을 위한 지속가능성, CSR 등에 대한 논의 등

자료: 저자 작성.

위와 같이 진행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i. 정책참여와 거버넌스, ii. 수용성의 성공사례와 주체별 역할, iii.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규제, iv.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정책 수용성, v. 정보제공, 정책홍보 및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정책참여와 거버넌스

본 절에서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일반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sup>56)</sup>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전문가, 공무원, 참여자 등 정책의 계획수립 과정 자체가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음. 좋은 정책도 도입초기에는 저항이 생기며, 부족하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는 수용성이 생기게 됨.
-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제시할 수 있음. 서울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청년의회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2~3월 공모를 하고 의회를 구성해서 몇 개월 동안 아이디어 진행을 하고 6~7월 시장, 시의회가 참여하고 그들이 토론한 내용을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고 예산을 시의원이 편성함
-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고, 참여하는 시민들은 행정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됨. 그래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경우 당사자들이 토론을 통해 몇 백 개 중 10개 정도로 정책 아이디어를 응축해서 질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그렇기에 서울시 사례는 대중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용성을 높이게 됨.

56)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 협력 등을 실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p.18;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6, p.16).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중간조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었으나 맥락상 중간지원조직과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해당 보고서에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표현하였다.

- 수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정부 부처, 계획가, 전문가, 시민의 문화를 거버넌스로 환치해보게 됨. 그러면 정책수립 단계에서 정책참여의 경험은 중요한 것 같음. 즉, 구성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거버넌스에서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고려해야 함.
- 한편 수용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도 중요함.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중간지원조직들을 많이 만든 것임. 해당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강한 집단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됨. 예를 들어 위에서 제시하였던 서울시 청년정책에서 구성하는 청년의회를 서울시 청년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허브조직이 하는 것임. 서울시가 학교에 위탁을 하고, 위탁을 받은 학교가 청년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일을 함.
- 그렇기에 정부 영역에서는 절차, 과정 등을 지침화해서 전달체계를 잘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중요함. 다만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면서 역량이 키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정책참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 대중들의 정책참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다.

국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생각함, 광화문1번가 등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책에 실제 영향을 주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편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 협력 등을 실행하는 기관 혹은 단체로(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협력자이자 조정자, 지원자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영역과 정부 수준(level)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김재현 외, 2013; 박세훈, 임상연, 2014; 김태영, 2016, 최준규, 2019).

### 나.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형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국민, 시장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는 해당 정책에 대한 수용성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 인간의 생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반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넘어 정책을 만드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형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정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정보가 왜곡되기도 하고 비대칭 상태가 되다보니 잘못된 정보들을 주민들이 쉽게 접하게 됨.
- 이에 우선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함. 예를 들어 녹조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소통방식을 보면 형식만 바꾸어 소통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짐. 행정과 전문가들의 소통이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주입하거나 전달하여 지키게 하는 형태로 보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소통을 일방적인 홍보 등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참여도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게 됨. 하지만 현실을 보면 책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불려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신뢰도의 참여가 다수임. 이에 소통과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재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정책을 실천해야하는 입장에서도 정책 대상자가 느낀 점을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 등이 필요함.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에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편 신뢰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단순히 행동(behaviour) 규제가 아니라 행위(action)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음.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주면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도 현재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으로 구분해서 정보를 제공하므로 수용성이 높지 않은 것 같음. 예를 들어 플라스틱 규제의 경우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려주면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 또한 시민들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음. 현재 대다수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에는 없는 상황임. 때문에 많은 지역 시민들이 환경단체에 연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이 조직이 잘 알아듣고 연락하기가 쉽기 때문임. 바로 피드백해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 다.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규제

기업은 환경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책의 수용성도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책 수용성과 관련된 논의가 더욱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수용성 요인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업은 규제를 해야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대기업에서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표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문제가 심각해보임. 즉, 우리가 보는 보고서가 진실이 아닐 경우가 많음.
-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에너지절약, 자원효율화, 친환경혁신 등을 통해 생산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지속가능발전이 더 필요할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수익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복잡한 규제 제도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사례가 나타남. 예를 들어 주유소와 정책 수용성을 보면 폐주유소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경영난으로 영업을 정지한 후 유류저장소의 관리를 하지 않게 될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게 되는데 철거비용이 최소 2억 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폐주유소의 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머물렀던 기업들은 모두 실패하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했던 기업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대부분이 성공하였음.



- 실패한 경우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은 길게 보는 측면이 있으나 경영전략을 세우는 중간관리자들은 짧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중장기 안목으로 전략을 고민하고 방향을 고민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됨. 이는 장기적으로 경영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올해 수익에 대해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이 논의되어 왔으며,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취지도 유사함. 이는 제대로 작동되면 좋은 제도로, 영국에서 시작됨. 영국은 기업을 감시하는 인력이 많다는 특성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차이가 있음. 영국은 기업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등의 특성이 있음.
- 다른 대안으로 국제표준이 가장 강력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를 많이 요구하고, 기업별로 SDGs 보고서를 만들게 하므로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음.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 국제표준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음.
- 환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와 병행할 필요가 큼.

#### 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정책 수용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정책 수용성은 해상풍력,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많다. 이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고 주민들 간의 이해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보상, 입지요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의사소통, 신뢰형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사례별 수용성 요인들이 다른 정책에 비해 더욱 다양하게 작용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의 수용성이 낮고 주민갈등이 심한 이유는 사업 입지 및 규모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임. 물론 전략환경평가가 도입되어 행정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추진 단계이며, 이 평가를 통해 사업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지지는 않음.

- 또한 주민참여와 정보공개<sup>57)</sup>의 경우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가 공청회를 주최함.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설명회, 공청회가 주민 방해로 무산되더라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은 타당하지 않음.
- 한편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나듯이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공개가 필요함.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검토회의 공개 등의 회의공개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에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처럼 환경부가 주관하면 사회영향평가는 어려움.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사회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분석이 사회영향평가의 기반이 될 수 있음. 최근 부산시에서는 환경·사회영향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수용성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스코핑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초안, 본안 단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함. 또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필요함.

#### 마. 정보공유 및 홍보, 학습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방안으로 정보공유, 정책홍보, 학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사회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와 발전된 조직문화 등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유 측면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슴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확산되고 있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환경부와 생활 화학제품 제조·판매 기업은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 현재 초록누리<sup>57)</sup>라는 시스템에 협약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고 있음.

57)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으로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정보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임(<http://ecolife.me.go.kr/ecolife/>).

- 그러나 제품에 함유된 성분만 나열되어 있어 정보를 접하는 대중들에게는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전 성분 공개만으로 대중들은 어떤 제품이 안전하고 덜 유해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성분 공개 자체가 도움이 되는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다 보니 혁신적이며 획기적인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내포한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생각함.
- 정책에 대한 홍보 측면에서 수용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정책들이 복잡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어휘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 접근하기 어려움. 최근에는 기존 방송매체에 비해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창구들이 많이 생김. 예를 들어 유튜브, 아프리카TV와 같은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체인지 그라운드,<sup>58)</sup> 강연남,<sup>59)</sup> 열정에 기름붓기<sup>60)</sup> 같은 콘텐츠 기업, TED, 세바시 같은 온라인 강연 등이 있음.
- 특히 10~20대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안하고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함.
- 한편 학습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학습보다는 소셜 러닝(social learning)이 강조되었으면 함. 사회적 학습이라는 것이 사회화 정도였는데 공동책임을 가지게 될 경우 좋을 것 같음. 공론화 위원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 과정도 대표적인 사회적 학습으로 볼 수 있음.

위와 같이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먼저 정책참여와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일반 대중들의 정책참여, 정책을 만드는 정부, 지자체 등과 받아들이는 주민, 기업 등 간의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형성에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 정책을 만드는 정부 등에 대한 신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 등이다.

58) '함께 성장합니다'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정보공유를 위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임.

59) '강연 읽어주는 남자'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지식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강연을 선별하여 이야기를 읽어주는 활동을 함.

60)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는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규제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자율관리 방안, 국제적인 표준 적용, 인센티브 등이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정책 수용성 부문에서는 모든 평가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 및 회의공개 등을 통한 신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정부, 기관 등의 피드백이었다.

끝으로 정보제공, 정책홍보 및 학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 대중들이 전문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제공방식, 사회 내 세대별 특징 등을 고려한 정책홍보, 공동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학습 등이 수용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7〉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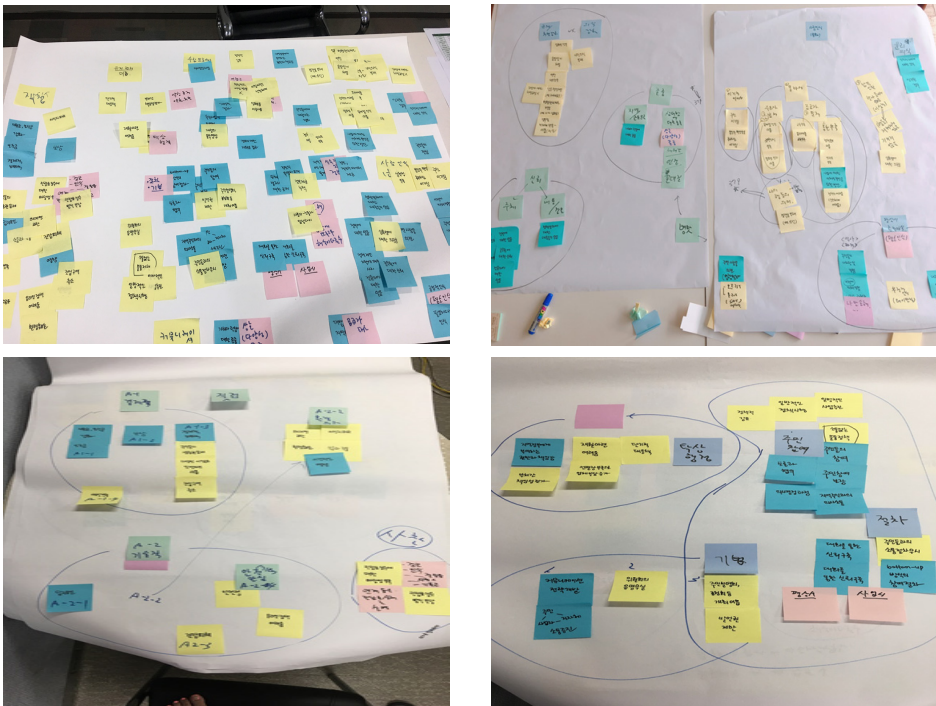
구분	수용성 요인
정책참여,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대중들의 정책참여</li> <li>· 정책을 ‘만드는 집단’과 ‘받아들이는 집단’ 간의 전달체계 (예) 효율적·체계적인 중간지원조직</li> </ul>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li> <li>·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기관에 대한 신뢰</li> <li>·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의사소통 체계</li> </ul>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들의 자율관리 방안</li> <li>· 국제적인 표준의 적용 (예) SDGs 보고서, CSR 보고서 등 인센티브</li> </ul>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정책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li> <li>· 정보공개, 회의공개 등을 통한 신뢰</li> <li>·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정부, 기관 등의 피드백</li> </ul>
정보제공, 정책홍보 및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대중들이 전문적인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제공방식</li> <li>· 세대별 특징 등으로 고려한 정책홍보</li> <li>· 공동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학습</li> </ul>

자료: 저자 작성.

#### 4. 소결

지금까지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요인들을 카드에 기입한 후 유사한 요인들을 대상으로 그루핑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루핑 작업 순서는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들을 비슷한 수준(level)에서 1차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1차로 분류한 요인들을 토론을 통해 직접적 요인, 약한 규제 및 낮은 시민의식, 상호 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정책수립 절차와 주민참여, 정보와 수용성, 정책 수립 및 집행집단 내부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으로 구분하여 2차 분류를 진행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3〉 수용성 요인을 구조화하는 작업

### 가. 직접적 요인

보상금, 경제적 혜택, 주민들의 생존권문제, 생계문제 등의 경제적 이득과의 관계는 정책 수용성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뽑힌다. 또한 시설의 입지문제, 서식지 파괴, 소음진동 등의 환경피해 등의 계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정책의 필연적인 저해 요인이다. 다만 이러한 직접적 요인은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나. 약한 규제 및 낮은 시민의식

수용성이 낮은 이유로 약한 규제를 드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즉, 규제를 강하게 하면 결국은 수용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낮은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 해결 방안이며,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효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 시민이란 개개인으로서의 시민만이 아닌, 기업, 정부, 전문가조직 등 모든 집단을 포함한다.

### 다. 상호 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사업자와 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 전문가에 대한 신뢰 부족 등 우리 사회의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상호간의 신뢰 부족을 들 수 있다. 주체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부족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 고유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다양한 가치관, 삶의 양식에 대한 존중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주체 간의 갈등과 반목이 커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 라.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환경 분야의 정책 수용성을 인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책 내용을 몰라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정책 내용은 알지만 이기심과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수용하지 않는 경우

셋째, 정책 내용은 숙지하고 있으나 정책의 당위성과 방식이 납득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거쳐 정책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마. 정책수립 절차와 주민참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보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불만인 경우가 많다.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불만으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참여라는 점이다. 즉, 주민참여의 시기가 늦다는 점이다. 또한 설명회, 공청회, 위원회 등의 참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나온다.

#### 바. 정보와 수용성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전달은 중요한 수단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를 듣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 정보전달은 실패한 것이다. 환경정책 분야에서 정책 공급자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급하고자 하나 수요자들은 관심이 크지 않다. 환경부 홈페이지를 보는 일반 주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결국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생산과 정보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 사. 정책수립 및 집행집단 내부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정책수립 및 수행집단 내부에서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가 많다. 정부 내에서도 위에서 정한 아젠다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며, 기업에서도 역시 환경부서의 목소리는 개발부서의 목소리에 파묻히는 경우가 많다. 집단 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제4장

#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 1.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의 유형

지금까지 수용성 요인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특징을 환경문화적 시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환경문화란 2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환경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활동과 관련한 개인, 집단, 사회의 관습, 규범, 도덕이라는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한다.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의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형성문화를 들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의 관습적 특징을 의미한다. 정책 아젠다를 형성하는 방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식,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둘째, 조직·집단문화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조직, 집단 고유의 내부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단체를 모두 포함한 우리사회 조직/집단의 특성을 의미한다.

셋째, 선개발 후환경의 개발우선문화를 살펴본다. 1980년대 이후의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물질적 윤택함을 우선하는 우리의 경제정책, 개발정책을 둘러싼 문화를 살펴본다.

넷째, 소통문화를 살펴본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는 수많은 정보가 오고간다.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양적인 풍부함 속에서 소통주체 상호간에는 소통 부족을 외치곤 한다. 특히 세대간, 직급 간의 정보의 차이와 소통의 차이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 가. 정책형성문화의 특징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등 빠르고 효율적인 정책성과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 그 당시 경제발전을 위해 전문가와 관료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은 빠른 경제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중심의 정책형성으로 인하여 현장과 괴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수용자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형성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주민참여방식, 리빙랩 방식, 공론화방식 등이 전문가, 관료 중심의 정책형성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와의 협업 또는 수요자의 견수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환경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정책 일반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환경정책은 효율성 중심 그리고 매체 중심, 기술 중심의 정책수립 문화가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후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매체 중심, 기술 중심이 중요하였으며, 이는 사후적 환경관리가 중심이던 시절의 환경정책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의 환경문제는 사전예방적인 특징과 함께 수용체인 사람 중심의 건강, 안전문제가 계속 증가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야 할 상황이 도래하였다.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는 특히 사람들의 행동습성, 가치관 등이 정책설계에 반영되어야 정책실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명확하다. 정책효과성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관계자 참여는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조직·집단문화의 특징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로는 환경부 등 행정기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조직/집단의 구성원이기도 한 국민 개개인의 환경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사업 우선의 정책수립이나 효율성, 이윤 중심의 기업경영,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행정기관, 기업 등 조직문화는 아직 충분히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도적으로 환경부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절차가 있더라도 실제로 반영되기는 어렵기도 하다. 기업이나 행정기관 모두 효율성 중심, 성과 중심의 경영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공서열 중심의 직장문화에서는 더더욱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 리더가 개발우선의 사고를 한다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형적인 사례가 각종 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과정이다. 전문가로 참여한 사람이 어떠한 발언을 하고 논의를 하였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누가, 왜 전문가로 참여하게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렇기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이지만 일반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 정책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논의 된 결과와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소신껏 말하는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 행정기관, 전문가 위원회 등 각종 조직이 환경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다. 선(先)개발·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화·도시화에 이르게 된다. 덕분에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에 도달하게 되고, OECD 가입 등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높은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제와서 경제개발 우선주의 정책의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1993년의 환경영향평가법의 도입, 2006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선개발·후환경의 문화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신도시개발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전국 곳곳에서 개발과 환경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의 구상단계, 입지선정단계 등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및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나 실제로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에서 계획이 구체화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지역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곤 한다. 이로 인한 주민갈등은 여전히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방안 마련 시 환경기준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지역 사정 및 사업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의 목표설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 기준만을 만족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저감방안보다 현 상태에서 최대한 가능한 목표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 라. 수용자의 소통문화

환경정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며, 정책을 수립한 후에는 명확하게 정책의 목적과 그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아야 한다.

정책홍보와 같이 개별 정책의 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잘 전달되기가 쉽지는 않다. 정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은 관심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홍보가 기관평가 등 본래의 목적이 아닌 부수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기관장 동정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 인지 혼란스럽다. 심지어 홍보내용이 공급자 입장에서 당위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이면 많은 사람들은 내용을 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매우 어려운 고민이다. 특히 환경문제는 때로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수반하기에 많은 이의 관심을 유발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소통이 어려운 이유로 매체수단의 문제가 있으나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로는 정책 수용자인 국민 스스로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선호한다는 것도 문제로 들 수 있다. 환경에 이롭지 않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벌칙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민 스스로가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 2.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가.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우리나라 정책은 매우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 짧은 기간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1980년대의 경제정책 및 개발정책은 이러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성공리에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환경문제와 지역 수용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신속한 의사결정에서 이제는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이라는 표현은 내용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본다는 의미와 함께 이해관계자 참여를 다양화한다는 양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형성문화의 현황 및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정책형성에서 수용자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형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기획, 전문가집단의 연구용역,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주민참여가 존재하나 개발사업이 아닌 경우 정책형성과정은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기에 일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 결과 정책수립 이후에 정책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정책 수용성과 효과성도 낮아지곤 한다. 정책수립 과정에 전문가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효율성 중시 문화에서 효과성 중시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였다. 다양한 법령, 지침 등을 수립한 이후 그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행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단기관의 성과가 중요했다. 정책을 만드는 권한은 있으나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정책의 질을 담보하지 않고 신속한 정책수립을 낱발하게 만든다. 그런데 정책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정책 담당자는 정책수립만이 아닌 정책효과성에 대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의 사전평가만이 아닌 사후평가가 중요

한 의미도 여기에 있다. 정책 담당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매체별·기술 중심형 정책형성에서 사람·정책 중심의 정책형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정책은 다양한 매체를 다루게 된다. 환경부의 부서 구분도 매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책은 매체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매체와 관련된 사람의 특성을 고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수자원 관련 연구는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이, 대기 관련 연구는 대기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책을 이행하는 사람, 즉 주민 또는 기업이 이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수립되기도 한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듯이 과학적 문제해결과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바라보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매체 중심의 연구에서 매체와 사람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정책형성문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

## 나.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 1) “사후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정책형성문화를 효율성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립되고 5~10년 후에 실제로 정책의 실적 또는 효과가 어떠한지 검증하는 사후정책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책 제목	- 사후 정책평가제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평가나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정책이나 사업수립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평가제도는 존재하나 실제로 사후에 실시하는 평가제도는 없음</li> <li>- 정책도입에만 몰입하는 아웃풋 중심의 정책수립에서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아웃컴(outcome)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임</li> <li>- 정책의 수용성 확보 차원과 동시에 정책수립 담당자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도 사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사후정책평가의 대상은 추후 논의가 필요함</li> <li>- 평가시기: 정책 및 사업 실시 후 5년 주기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li> <li>- 평가항목: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5항목이며, 항목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li> </ul> <table border="1"> <tr> <td>적절성</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근거는?</li> <li>· 정책 추진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한지?</li> </ul> </td></tr> <tr> <td>효율성</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획한 예산, 기간, 자원으로 정책수립?</li> </ul> </td></tr> <tr> <td>효과성</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li> <li>· 실제 기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li> </ul> </td></tr> <tr> <td>영향력</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으로 인한 긍정/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지?</li> </ul> </td></tr> <tr> <td>지속가능성</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li> </ul> </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주체: 환경부의 자체 평가 및 제3자 위원회의 리뷰</li> <li>- 평가 예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후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검증,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 분석</li> <li>- 도입 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단계)의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주요 환경부 정책/시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li> </ul>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근거는?</li> <li>· 정책 추진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한지?</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획한 예산, 기간, 자원으로 정책수립?</li> </ul>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li> <li>· 실제 기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li> </ul>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으로 인한 긍정/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지?</li> </ul>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li> </ul>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근거는?</li> <li>· 정책 추진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한지?</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획한 예산, 기간, 자원으로 정책수립?</li> </ul>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li> <li>· 실제 기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li> </ul>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으로 인한 긍정/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지?</li> </ul>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평가는 예측기법이라면 사후평가는 검증기법임</li> <li>- 정책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정책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기대함</li> </ul>										
선행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분야에서는 이미 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li> <li>-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지침’</li> <li>-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li> </ul>										
환경부 역할	- 사후평가 시범사례 실시 및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2) 아젠다 설정단계의 공론화 제도 도입

정책이나 계획의 구상단계에서 전문가 참여와 이해관계자 참여가 공존하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론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정책 제목	- 아젠다 설정단계의 공론화 제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갈등의 첫 단계는 정책/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임</li> <li>- 그런데 현행 주민참여제도는 정책/사업의 도입을 전제로 한 설계단계에서 실시되고 있음. 이에 주민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발생</li> <li>- 아젠다 설정단계, 필요성 검토단계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모든 사업에 대해 실시할 필요는 없음. 대상 사업을 미리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주민이 필요시에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제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함</li> <li>-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환경정책기본법 내에 아젠다 설정단계에서 공론화 또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li> <li>· ② 개별 사업추진 계획 속에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가능 (예)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에서 입지선정단계에서의 공론화 보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스코핑 단계에서 주민참여 보장 등)</li> </ul> </li> <li>- 공론화 방식: 공론화는 공개된 논의를 전제로 하는 다양한 회의방식을 의미함. 따라서 숙의형 여론조사만이 아닌 워크숍 방식, 위원회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중요한 것은 토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회의 참석자만이 아닌 지역 주민과도 논의과정을 공유하는 것임</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단계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지역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사업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임</li> <li>- 사업의 기획조사단계에서 지역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빠른 단계에서부터 갈등관리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됨</li> </ul>
선행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2017년)</li> <li>-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2011년)</li> </ul>
환경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책구상단계에서의 주민참여 추가</li> <li>· 개별법에서 주민참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li> </ul> </li> <li>-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복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시범사업</li> </ul> </li> </ul>

### 3) 숙의형 참여기법의 보급

개발사업이나 정책의 추진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가 존재한다. 그러나 설명회, 공청회 등 회의형식은 단순하며 일회성 참여방식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이 서로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숙의형 참여기법의 보급은 정책의 수용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 제목	- 숙의형 참여기법의 보급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필수조건임</li> <li>-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갈등관리가 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함</li> <li>- 주민참여가 형식화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주민참여의 기법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모여서 논의하기 위한 회의기법 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li> <li>- 공론화 위원회를 계기로 숙의형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기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의형 참여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개별 기법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입조건을 설명하는 매뉴얼 보급과 시범 사례가 필요함. 구체적인 숙의형 기법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Deliberative Polling</u>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토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많은 숙의를 거친 후에 다시 투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법)</li> <li>· <u>Planning cells</u> (무작위 추출로 5~6명 단위의 작은 그룹들을 만들어 토의한 후 계획수립에 대한 제언을 하는 방법)</li> <li>· <u>consensus conference</u> (과학적으로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과학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프레임을 맞추어가는 기법)</li> <li>· <u>scenario workshop</u> (현재 상황이 아닌 향후 미래의 여러 시나리오를 토의하며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우선 이룬 후에 실천과제를 마련하는 기법)</li> <li>· <u>charrette workshop</u> (전문가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조율/합의를 이루어가는 기법)</li> <li>· <u>Joint Fact-Finding</u> (대립하는 과학적인 사실(평가)의견에 대하여 모델의 전제 조건, 결과 값의 의미 등에 대해 서로 토의하며 합의를 이루어가는 기법)</li> </ul> </li> </ul>
기대효과	-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형 참여기법을 보급함으로써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라는 기존 주민참여의 개선을 기대함
선행 사례	- 없음
환경부 역할	- 숙의형 참여기법 매뉴얼 작성 및 보급



###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가. 조직·집단문화의 현황과 개선방향

조직문화 개선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조직문화라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구성원이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장유유서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서열구조 및 전문가 주의 등 기존의 수직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문화로의 개선은 쉽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기관 내에서도 기업 내에서도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개인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며, 실제로 어렵다고 한다. 조직의 상관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개진이 우리사회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집단의 의사결정 문화는 민주적, 공개적, 자율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조직·집단문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의 책임성 강화이다. 대표적인 것이 위원회 운영의 폐쇄성이다. 위원회는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의 정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가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지식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의 전환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환경피해, 지역사회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도 지속적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책임에는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관리 문제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경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획일적 규제문화에서의 탈피이다.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대기업부터 소규모 자영업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사업특성 및

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은 실행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업특성, 기업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환경관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와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조직·집단문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

## 나. 조직·집단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 1) 회의공개제도의 도입

위원회제도는 행정기관의 정책수립에 자문을 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론에 지역 주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입장 차이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회의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해 본다.

정책 제목	- 회의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법이 도입되었으나 회의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li> <li>- 정책 의사결정에 주요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li> <li>- 투명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음</li> <li>- 전문가의 비전문적 발언, 정치 편향적인 발언, 비소신 발언 등의 문제가 발생 (예)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공개제도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li> <li>- ① 회의공개 목적, 원칙, 정의, 적용대상</li> <li>- ② 회의공개 방법: 첫째, 회의개최의 공지, 회의방청의 허용, 회의결과의 공개</li> <li>- 회의록은 발언자명과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공개</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언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전문가의 책임감 강화”</li> <li>- 어용위원 시비에서 탈피 가능하며, 위원선정의 공정성 확보</li> <li>- 전문가 인선과정 및 논의과정,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확보</li> </ul>
선행 사례	- 미국, 일본 지자체의 회의공개제도
환경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li> <li>· 환경부 회의공개제도의 도입 또는 지자체 회의공개 조례 지침 마련</li> </ul>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회의공개조례를 작성해 보았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 (예시) ○○시 회의공개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기반하여 ○○시의 각종 회의 등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 원칙)** ○○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정보”란 ○○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회의는 ○○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2장 회의공개 방법

**제5조(공개 여부의 판단)** ① 이 조례의 대상인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비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 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한 정보공개심의회는 비공개 대상정보 및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제6조(회의 개최의 공지)** ① 이 조례의 대상인 회의의 개최 여부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어야 한다. ② 회의개최 공지 시에는 회의제목, 회의장소, 참석자 명단, 주요 의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시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인 접수에 대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방청)** ① 회의는 ○○시민을 포함하여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② 방청은 사전에 신청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방청인에게는 회의참여위원들과 동일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방청인 수는 제한할 수 있다.

- ⑤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방청인에게 사전에 주지한다.
- ⑥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방해가 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기록)** ① 회의록은 발언자 이름,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록한다.  
② 회의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며 기록한 매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결과와 공개)** ①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대상은 회의록과 녹음 또는 녹화한 매체를 포함한다.

### 제3장 기타

**제10조(의회 보고)** ○○시의 정보공개 총괄부서는 매년 회의공개조례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확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CSR 보고서를 발행하여 기업의 사회적 평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CSR 보고서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정책 제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환경경영을 중심으로)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환경, 사회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li> <li>-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및 지역갈등 방지 등 포함</li> <li>- 우리나라도 CSR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이 늘었으나 아직은 형식적인 부분이 많음</li> <li>-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CSR 경영을 확대하고 권장하는 제도가 필요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SR 중에서 환경경영에 관한 부분은 아래를 포함하여야 함. 환경경영은 환경관리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모두 포함함</li> <li>- ① 리더십; 기관장의 환경경영 관련 정보발신, 매체 인터뷰, MOU 등 환경경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li> <li>- ② 거버넌스; 환경경영 위원회, 환경 담당 임원(사외이사), 환경전담부서 설치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시스템과 환경관리시스템의 연계방안 등</li> <li>- ③ 커뮤니케이션; 대내외 환경소통 기구 설치, 대내외 환경교육 기회제공</li> <li>- ④ 환경관리; 기후변화(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자원순환), 생물다양성(환경복원) 등</li> <li>- ⑤ 법령준수; 환경법령준수사항, 관련 민원대책 마련</li> <li>- ⑥ 환경경영체계; 경영전략과 환경경영계획의 연계성 마련</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과 동시에 내부 거버넌스에서 환경 분야 강화 가능</li> <li>- 기업의 의사결정 및 사후관리에 환경 분야 강화 효과</li> </ul>
선행 사례	- 국제 규범에 따른 CSR 보고서 발행(UN 글로벌 콤팩트 등)
환경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마련)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경영보고서 작성 지침 마련</li> <li>- (모니터링) 매년 우수 환경경영보고서에 대한 표창 등</li> <li>- (보급 확대) 환경영향평가 시에 기업의 환경관리 대책에 대한 내용 강화 등</li> </ul>

### 3) 맞춤형 친환경 지침의 보급

기존의 친환경생활 지침 등 다양한 친환경 지침보다는 조직이나 집단의 특성을 살린 간단한 지침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많은 다양한 정보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침을 만들어주길 원한다. 환경부가 맞춤형 지침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이를 보급하는 것은 지자체나 협회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 제목	- 맞춤형 친환경 지침의 보급
필요성	- 기존 친환경 지침은 너무 광범위하여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상황에 맞는 간단하고 명료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전달체계도 중요함
주요 내용	- 친환경 국무회의 지침(일회용품 사용금지, 실내온도 유지, 쿨맵시 등) - 친환경 연구자문회의 지침(일회용품 사용금지, 텀블러 사용 등) - 친환경 야구장 지침(플라스틱 생맥주컵 중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친환경 전국체전 지침(교통, 숙박, 건설 등 관련 지침) - 친환경 배달음식 지침(일회용품 사용 안 할 시의 인센티브 등) - 친환경 학회운영 지침(학회 개최지 선정 시 대중교통 편의 등 검토, 학회 운영의 온실가스 추산 등) - 친환경 고속버스 등(휴대폰 사용 등 소음에 대한 주의경고 등) - 친환경주유소(유류 토양오염 등에 대한 주의 등) - 친환경관용차 지침(관용차는 친환경차 권장, 배기량 기준 낮춤 등)
기대효과	- 간단하고 명료한 상황에 맞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여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음
선행 사례	- 친환경 동계올림픽 수행 지침, 친환경 이벤트 지침 등
환경부 역할	- (지침 수립) 분야별 지침 마련 연구 발주 가능함. 리빙랩과 같이 소속집단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함 - (네트워크 구축)전달체계로서 지자체, 협회, 법인 등 네트워크 구축

#### 4.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 가. 개발우선문화에서의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개발 성장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우 윤택해져왔다. 많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해문제, 생태계파괴 문제 등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도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도 지역갈등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과 같은 친환경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에서도 지역갈등은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을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아직까지도 선개발계획 후환경대책의 정책수립이 많다. 대표적으로 보면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문제, 신도시개발사업문제, 신공항건설사업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략환경영향평거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주민참여 절차는 사업의 규모나 입지가 결정되고 난 후에 이루어지므로 주민의견이 계획 구상에 반영 되기는 힘든 구조이다. 계획의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배려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갈등관리에는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 아직까지 많은 사례에서 지역갈등의 관리에 공공기관이 나서지 않고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미루고 있다. 입지선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민참여는 사업자 주관의 설명회와 공청회가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주민참여의 장에서는 갈등이 조정되기보다는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사업자가 환경적인 배려, 주민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계획입지 제도와 같이 공공이 주도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갈등관리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의 문제이다. 사업자는 법적 기준만 달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반론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량적인 법적 기준이 없는 생태계문 제, 경관문제 등은 기준주의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지역별 특성,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아닌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점이다.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맞



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역별 환경목표를 설정하거나 또는 사업별로 환경목표 기준을 설정해가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개발우선문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

## 나. 선(先)개발 후환경의 개발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500억 이상)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며, 실제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조사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용적 타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 제목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예산결정 이전에 실시하는 평가제도로 매우 강력한 스크리닝 기능을 가지고 있음.</li> <li>-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환경에 대한 내용과 지역 수용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과 절차적으로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li> <li>-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업평가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내용 강화</li> <li>- 정책적 분석에 환경적 내용 강화가 필요함. 다만 사업이 구체화되기 이전일 수도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와 같은 상세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음. 환경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기존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함</li> <li>- 환경 분야 조사에는 환경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여야 함</li> <li>- 정책적 분석에 지역 주민의 수용성 조사가 포함되어야 함. 사업에 대한 주민대상의 설문조사 등이 필요함</li> <li>-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포함</li> <li>- AHP 분석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여 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ul>
기대효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종합평가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사업 수용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스크리닝 효과를 기대함
선행 사례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환경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기재부와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을 추진</li> <li>- (제도개선)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사회성과 경제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li> </ul>

## 2) 계획입지제도의 도입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환경문제와 수용성문제로 인해 주춤하고 있다. 이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수용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지자체 공모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 동의 절차는 필수 조건이다.

정책 제목	-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사업이 환경문제와 지역 수용성 문제로 전국 각지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li> <li>- 현재는 사업자가 개별입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이며,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 고려가 별로 없음</li> <li>-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수요조사, 주민참여가 없음</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논의된 계획입지제도와 더불어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함</li> <li>-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입지선정 기준을 미리 마련(입지선정 기준에는 사업성(기술적 조건)과 환경성(환경피해 최소화 여건) 그리고 지역 수용성 요건이 포함되어야 함)</li> <li>- 지자체 공모 시에는 반드시 주민수요조사와 주민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함</li> <li>- 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지역 어민의 동의를 의무화하여야 함</li> <li>- 입지선정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검토. 협의회 운영은 공개로 진행</li> <li>- 사업자 공모제 도입. 사업자 공모기준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li> <li>- 사업자 공모기준에는 기술적 기준, 경제적 기준과 동시에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기준을 포함하여야 함</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기서 제시하는 계획입지제도는 기존의 계획입지제도에 주민참여, 주민 수용성 조사 등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임</li> <li>- 입지선정 책임을 사업자에서 정부로 전환하고, 갈등요소가 있는 후보지역은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갈등관리에 기여함</li> <li>- 사업자 공모제를 통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됨</li> </ul>
선행 사례	- 일본, 덴마크, 영국 등의 해상풍력 추진 관련 제도 등 참조
환경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기존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검토가 산업자원부 주도이었다면 새로운 계획입지제도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함</li> <li>-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입지제도에 맞는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기존의 전략환경영향평가보다 더욱 빠른 단계에 해당하며, 복수 대안의 검토가 필수 조건임</li> </ul>

### 3)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평가과정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청회를 통해서 갈등이 조정되기보다는 공청회 자체가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청회가 2차례 무산되면 개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도 있다. 공청회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

정책 제목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제도 개선(사업자 주관에서 행정기관 주관으로 전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주민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li> <li>- 그런데 상당수 공청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음</li> <li>- 공청회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공청회 주관 기관의 검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공청회는 사업자가 주관한다. 공청회는 Public hearing과 같이 주민의견을 듣는 장치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주관하다 보니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이 잘 안되고 따라서 주민들은 공청회 개최를 방해한다. 공청회 주관기관을 지자체 또는 협의기관인 환경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li> </ul> </li> <li>- <u>공청회 운영 기법의 검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공청회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운영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황에 맞춰 회의운영기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 가와사키시의 공청회와 같이 주민들에게 3차례 질문기회를 주면서 관심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컨센서스 회의와 같이 전문가와 주민이 토론하는 공청회도 있다. 다양한 운영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li> </ul> </li> <li>- <u>공청회 운영 시기의 검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는 초안에서만이 아니라 스코핑 단계에서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 참여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과 사업자의견을 조율하는 공청회 운영을 통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역할</li> <li>- 협의기관이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li> </ul>
선행 사례	- 미국, 일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조례 등
환경부 역할	- (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법,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조례의 공청회 개선(주민참여 개선)방안 검토

#### 4) 사회영향평가의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공해방지, 오염원관리 등의 생활환경과 생태계 등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경제 항목에서는 단순한 인구 데이터를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환경부의 업무영역과 사회 분야 평가내용의 괴리도 제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조례와 갈등영향평가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정책 제목	- 사회영향평가조례 도입방안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부의 업무영역을 벗어나기 어려움. 따라서 자연환경, 생활환경 중심의 협의를 진행.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li> <li>-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li> <li>- 환경영향평가법보다는 승인기관인 지자체가 주도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를 환경사회영향평가조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li> <li>- 특히 이미 존재하는 갈등영향에 관한 조례와의 통합운영을 검토</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사회영향평가 강화방안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연계</li> <li>- 환경영향평가조례 절차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절차는 스코핑, 초안, 본안, 사후조사의 4단계를 규정하여야 함</li> <li>· 특히 스코핑은 위원회 형식만이 아닌, 주민참여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li> <li>· 스코핑은 평가항목 선정만이 아닌, 쟁점사항(이슈)의 정리가 중요함</li> </ul> </li> <li>- 주민의견수렴(공청회 등) 개최 기관은 사업자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 변경(*구청 및 시청 관계자 참석)</li> <li>- 심의위원회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환경사회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개편. 심의사항 추가(*환경영향평가법 대상 사업, 약식절차)</li> <li>· 사회영향분야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포함</li> <li>· 위원장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li> <li>· 위원회 공개 및 방청 허용 검토</li> </ul> </li> </ul>
기대효과	- 사회영향평가의 강화로 갈등요소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지역 수용성 확보에 기여 가능
선행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일본 등은 중앙정부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건수보다도 지자체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더 많음</li> <li>- 미국, 호주, 홍콩 등에서 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중</li> </ul>
환경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사회영향평가 도입 마련 지원</li> <li>- 사회 분야의 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마련</li> </ul>

## 5.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 가.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정부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 환경부나 산하기관들도 각각의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 국민들이 그 홍보채널에 아예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이 교육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불만이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홍보는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전문가와 전문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달라져야 한다. 당연히 그 내용과 형식은 홍보전문가와 내용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정책홍보를 즐기면서 유익함을 느끼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급자, 공급기관 중심의 산발적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는 10여 개 기관이 동시에 정책홍보 자료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내용은 연구 성격의 내용이 대부분이며,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다. 수요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소통방식과 소통공급자의 문제만이 아닌 소통소유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이해하나 행동에 못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기심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개인 성향에서 비롯한 경우도 많다. 일회용품 사용, 냉난방기구 사용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게 되면 우리 생활은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양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4〉 소통문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

## 나.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 1) 친환경문화 인플루언서 3만 명 보급계획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전달과 동시에 수요자에게 관심과 공감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의 행동양식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넓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존에 친환경 홍보대사 등 유명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는 방송, 영화, 시나리오 등 우리사회에 영향력이 큰 문화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정책 제목	- 친환경문화 인플루언서 3만 명 보급계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독자가 별로 없는 홍보물 제작,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홍보물에서 탈피하고 자연스럽게 수요자에게 공감을 유발하는 대중문화 및 유명인의 활용이 필요함. 특히 유튜버 등 새로운 소통방식에 대응하여야 함</li> <li>- 감독, 피디, 작가 등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 즉,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꾸준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친환경소재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원리는 기존에는 환경부 → 국민의 1단계 전달이었다면 본 제도는 환경부 → 인플루언서 → 시청자 → 국민의 다단계 전달체계임</li> <li>- 환경을 테마로 한 홍보물 제작에는 한계가 있음. 본 제안은 환경홍보물보다는 영향력 있는 홍보물에 친환경내용을 티 나지 않을 정도로 반영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텀블러를 들고 대화하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li> </ul> </li> <li>- 환경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친환경 인플루언서 위촉 (영화드라마 감독, 작가, 유튜버, 작곡가, 방송인 등 3만 명 위촉)</li> <li>· 환경피해 사례, 친환경행동 사례, 친환경 해외 사례 등 다양한 소재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정보제공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함</li> </ul> </li> <li>- 인플루언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행동 패턴 등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나리오에 반영</li> <li>· 당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됨. 긴 안목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이 친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음</li> </ul> </li> </ul>
기대효과	-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친환경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공감을 유발할 수 있음
환경부 역할	-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제공하여야 함.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2) 환경정보 통합운영기관 설치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 관련 환경 분야 기관은 각각 다양한 형태의 환경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낮다. 정보발신의 목적이 국민에 대한 정책의 홍보인지,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홍보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기관은 기관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원하는 경우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통합이 필요하다.

정책 제목	- 환경정보 통합운영기관 마련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각의 기관이 환경정보를 각각 제공함</li> <li>- 홍보, 정보 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담당함으로써 정보 내용이 딱딱하고 재미없음</li> <li>- 구독자 수가 별로 없음</li> <li>- 공급자 입장에서의 정보제공에서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보제공이 필요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현안, 정책현안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기관, 관련 기관의 공동제작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면 미세먼지에 대한 유튜브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각각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li> <li>·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하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의 홍보물을 공동제작하여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li> </ul> </li> <li>- 환경정책 홍보물을 만드는 전담기관(전담부서)의 운영을 통해 홍보물의 수준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부서는 환경전문가와 홍보전문가, 시나리오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본 업무만을 전담</li> </ul> </li> </ul>
기대효과	- 정책홍보물의 수준이 높아지고 구독자 수도 확대되기를 기대함
환경부 역할	- 공동제작을 위한 예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3) 친환경생활을 유도하는 세임 캠페인(Shame Campaign)

우리 사회는 굳이 친환경생활을 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 담뱃값의 건강 경고 사진과 같이 법적 규제는 아니나 소비자들의 행동에 자극을 주는 캠페인은 효과적이다.

캐나다의 어느 슈퍼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비닐봉지를 유료화하는 것보다 비닐봉지에 부끄러운 문구를 써놓으니 비닐봉지 사용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친환경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세임 캠페인을 제안해본다.

정책 제목	- 세임 캠페인
필요성	- 친환경생활 양식에 벗어나더라도 법적 규제가 없는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은 거리낌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자신의 행동이 친환경이지 않을 경우, 그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의 캠페인이 필요함 - 캠페인은 제도적인 규제보다 다가서기보다는 민간 주도가 바람직함
주요 내용	- 슈퍼마켓, 커피숍, 주유소, 패스트푸드, 배달음식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삶에 밀접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세임 캠페인을 진행 · 예를 들면 일회용 비닐봉지에 “이 비닐봉지는 지구 건강에 해롭습니다.” 일회용 배달용기에 “나의 편리함이 우리 후세의 불편을 키웁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일회용 비닐봉지에 환경과는 무관하더라도 소지하기에 창피한 사진이나 문구를 붙임으로써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렵게 유도함
기대효과	- 소비자들의 친환경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문화 확산에 기여
환경부 역할	- 친환경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들과의 자발적인 협약 추진 - 친환경 세임 캠페인 지원을 위한 사례집 발간 등

## 제5장

### 결론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환경문화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와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정리하였고, 문헌조사,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환경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경문화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구분한 유형에 해당하는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행목적과 타당성, 구성, 방안 등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소통하는 과정 등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동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바라보고, 다루는지와 관련된 환경문화의 역할은 가치가 크다. 이에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조직문화, 집단문화 등 그 사회의 관습, 특성 등을 표현하는 광의적인 관점에서 문화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저하 요인들을 크게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보상금, 인센티브 등의 경제적인 혜택,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물리적인 입지조건 등이 해당되었고,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책을 만드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받아들이는 정책 대상자들의 특성, 지역사회 특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약한 규제, 미흡한 사후관리, 시민의식 부족, 상호간 신뢰 부족, 개인의 이기심, 정책수립 절차, 정보전달의 문제,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환경문화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문화유형별로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3가지씩 제안하였다.

- 첫째, 정책형성문화이다. 정책형성문화는 전문가 관료 중심에서 수요자와의 협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매체·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 둘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집단의 문화이다. 전문가집단은 폐쇄성에서 공개성으로, 기업집단은 이윤추구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로, 정부는 획일적 규제문화에서 맞춤형 자율적 규제 유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 셋째, 선개발 후환경의 개발우선문화에서의 탈피이다. 특히 환경 관리 및 수용성 관리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기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적 성격의 기준주의와 동시에 계획적 성격의 목표설정도 중요하다.
- 넷째, 소통문화이다. 재미없고 권위적이고 교육적인 소통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이고 흥미 있는 소통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5-1〉 환경문화 유형별 정책제안

문화유형	구분	정책제안
정책형성문화의 전환	정책제안1	· 정책평가(사전, 사후 포함)제도 도입
	정책제안2	· 아젠다 설정단계의 공론화 도입
	정책제안3	· 숙의형 참여기법의 도입
조직·집단문화의 전환	정책제안1	· 회의공개제도의 도입
	정책제안2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정책제안3	· 집단 맞춤형 친환경지침의 보급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정책제안1	· 계획입지제도의 도입
	정책제안2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
	정책제안3	· 갈등조정을 위한 공청회 방식 개선
	정책제안4	· 환경/문화/교통/갈등영향평가의 통합
소통문화의 전환	정책제안1	· 환경 인플루언서 3만 명 보급
	정책제안2	· 통합형 환경정보 발신 시스템
	정책제안3	· 불편하게 하는 세입 캠페인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국가별, 지역별, 정책별, 개인별로 다양함에도 그 범위가 넓어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사례분석이나 정책제안 과정에서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 사례 중심의 분석 및 정책을 만드는 이들의 문제만을 지적해온 반면 본 연구는 환경문화 측면에서 정책을 만드는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소통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 선행연구, 문헌조사 외에 현장 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구승희(2004), 「생태위기와 환경윤리, 지구촌 공동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권향원, 김성민, 한수정(2017), “숙의 거버넌스의 저해요인 연구: 한국의 사례들의 메타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2), pp.189-216.
- 김경철(2004),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당면과제”, 「서울경제브리프」, 32, 서울연구원.
- 김근식, 김서용(2017), “다차원적 편익지각이 원자력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55(4), pp.207-245.
- 김근식, 이선우(2016), “원자력수용성에 대한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 분석: 긍정/부정 프레임의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 pp.185-220.
- 김동영, 조재만(2009), 「‘악취 끝 프로젝트’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경기연구원
- 김동일(2016), 「피에르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명소, 한영석(2001), “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온라인 구매행동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pp.17-32.
- 김서용(2005),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pp.43-66.
- 김선일, 허용훈(2015), “우리나라 도로명주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pp.539-555.
- 김성은, 김성연(2009),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pp.17-207.
- 김영곤, 고대유, 송하중(2016),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전략에 대한 소고: 정부불신의 해소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4(1), pp.33-67.
- 김용근, 황기인(2013),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활용”, 「에너지기후변화교육」, 3(2), pp.161-169.

- 김은성(2018), “우리나라 풍력발전단지의 주민 수용성에 대한 감각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 「환경사회학연구 ECO」, 22(1), pp.209-241.
- 김재근, 권기현(2007),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 수용성 분석: 경기도 광주시 지역 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pp.187-207.
- 김재신(2013), “환경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11”, 「한국정책학회보」, 22(2), pp. 259-281.
- 김재현 외 (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관(2010), “문화의 개념과 문화교육-언어교육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화」, 6(3), pp. 43-61.
- 김준현, 권기욱(2011), “새주소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활성화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 13(1), pp.31-42.
- 김창수(2004), “환경정책수단 선택의 딜레마: 협력과 강압의 정치경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pp.383-405.
- 김태승, 권혁신(2015), “시차이론의 숙성기 모델을 통한 정책사례연구”, 「한국행정논집」, 27(3), pp.691-717.
- 김태영(2016), “사회적경제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정부학연구」, 22(2), pp.81-125.
- 김현제, 박찬국(2012),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수용성 확보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김현희(2009),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문화적 조건 연구: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의 경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pp.299-313.
- 문일봉(2017), “미디어 이용 및 채택 행동에 적용된 계획된 행동이론(TPB)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창권 외(2016),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지원범위 합리적 조정 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통상자원부.
- 박광무 외(2013), 「한국 문화정책론」, 개정판, 김영사.
- 박세훈, 임상연(2014),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국토연구원.



- 박시한, 한미정(2017),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행동의 이해: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1(2), pp.195-230.
- 박종민, 박진홍(2015), “복권구매행동의도의 선행요인구조 분석: 계획된 행동이론 VS 합리적 행위이론”, 『광고연구』, 105, pp.36-73.
- 박찬봉(2019), “합리적·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복어요리 소비자 구매행동 분석”,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희서(2006),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재활용 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0(4), pp.113-129.
- 박희서, 노시평, 김은희(2007), “환경친화적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합리적 행동이론(TRA)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2), pp.97-119.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6),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안정화 방안 및 발전전략 연구”.
-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2017), “도로명주소, 서울시민들의 생각은?”, 『서울인포그래픽스』, 230.
- 성보현(2019),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생활문화활동 참여의도 영향요인 분석: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정책연구』, 30(1), pp.46-62.
- 신성일(2015), 『수도권 통합대중교통체계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 신용승 외(2016),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신윤창, 안치순(2009),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pp.189-211.
- 안용준, 지남석(2018),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안현경(2017), 『코네틱 리포트: 반응기 보증금제도의 특징과 운영실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양현미, 심광현, 박광희(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종엽(2003), “의약분업정책의 정책 수용성 평가: 정책 수용성 확보전략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옥진아(2016),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NO.241.

- 윤인진 외(2007), “쓰레기 매립지와 거리에 따른 매립지 수용의 결정요인 및 중요도 변화 분석”, 『서울도시연구』, 8(4), pp.53-71.
- 이상민, 임정실, 문정욱(2012), 「전국 대중교통 통합체계 구축연구 총괄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 이상민, 임정실(20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한국교통연구원.
- 이상현(2018), “서울시 전환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학연구 ECO』, 22(2), pp.41-76.
- 이상훈, 윤성권(2015),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법과 정책』, 15, pp.133-166.
- 이시경(2014), “환경정책의 가치체계: 목표가치와 수단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pp.21-43.
- 이정임, 정혜윤(2019),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pp.1-25.
- 장재임, 추호정(2015),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명품 복제품의 사용과 재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9(2), pp.433-445.
- 장현숙(2019),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정규호(2003), “한국 환경문제의 기원과 전개과정 및 특성”, 『계간사상』, 12, pp.7-30.
- 정금희, 최윤정(2019), “수용자의 능동적 행위로서 미디어 몰아보기(Binge watching):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적용한 몰아보기 행동 모형”, 『한국방송학보』, 33(3), pp.141-179.
- 정우락 외(2015), 「문화어문학이랑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p.40.
- 정주용(2008), “정책 수용성 급반전현상에 관한 연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지범(2010), “입지정책 분야에서의 갈등과 조정: 경주 방폐장과 스웨덴 방폐장 사례 비교 연구”, 『행정논총』, 48(4), pp.145-169.
- 정호규, 남영숙(2017), 「업계종사자 관점에서의 분리배출 실태 분석 연구: 플라스틱류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pp.122-125.
- 정호규, 남영숙(2018), “개인의 분리배출 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pp.33-38.
- 정희성, 변병설(2003), 「환경정책의 이해」, 서울:박영사.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지원조직 매뉴얼」.
- 채종현 외(2017), 「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연구(2006),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지식총서.
- 최준규(2019),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최진철(2014),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문화개념과 연구방향”, 『독일어문학』, 65, pp.207-237.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사업실(2016), 「빈용기 보증금제도 설명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 「미래를 위한 환경정책 되돌아보기」, 크레파스북.
- 함한희(2009),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문화적 조건 연구: 새만금간척개발사업의 경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pp.283-297.
- 홍영혜, 조명옥, 태영숙(2005), “한국 성인당뇨병 환자의 식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5(2), pp.31-322.
- 환경부(2016), 「1회용품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 환경부(2018a),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 환경부(2018b),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 환경부(2019), 「일회용품 없는 마켓(에코플라자)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 황보상원(2017), “도로명주소 상세주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3(3), pp. 65-74.
- 황운용(2016), “쓰레기 불법소각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pp.187-188.

## [국외문헌]

- CECILIA(2013), *What Influences Public Acceptance of the Current Policies to Reduce GHG Emissions?*
- Dolnicar, S., A. Hurlimann, and B. Grun(2014), “What Affects Public Acceptance of Recycled and Desalinated Water?”, *Water Res*, 45(2), pp. 933-943.

- Dore and Lebel(2010), "Gaining Public Acceptance: A Critical Strategic Priority of the World Commission on Dams", *Water Alternatives*, 3(2).
- Ellis, G. et al.(2016), "The Social Acceptance of Wind Energy", *EU*.
- EUROMAP(2016), *Plastics Res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63 Countries Worldwide 2009-2020*.
- IAEA(2007), *Factors Affecting Public and Political Accept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Geological Disposal*.
- Ingmar, S.(2013), "The Endogenous Formation of an Environmental Culture Version 1", *IPAG Business School*.
- Jobert, A., P. Laborgne, and S. Mimler(2007), "Local Acceptance of Wind Energy: Factors of Success Identified in French and German Case Studies", *Energy Policy*, 35, pp.2751-2760.
- Martina, L. et al.(2010), *The Role of Societal Acceptance in Renewable Energy Innovations' Breakthrough in the Case of Deep Geothermal Technology*.
- Onwuegbuzie, A. J. and N. L. Leech(2007), "A Call for Qualitative Power Analyses", *Quality&Quantity*, 41: 105-121.
- Raymond, W.(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ankey, G. H. and B. A. Shindler(2006), "Formation of Social Acceptability Judgmen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are and Little-known Species", *Conservation Biology*, 20, pp.28-37.
- Schultz, P.(2002),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Across Cultur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8(1).
- Steg, L., L. Dreijerink, W. Abrahamse(2006), "Why are Energy Policies Acceptable and Effective?", *Environment and Behavior*, 38(1), pp. 92-111.
- Wan, C., G. O. Shen, and S. Choi(2017), *A Review on Political Factors Influencing Public Support for Urban Environmental Policy*.

- Wenqi, D.(2018), “How Culture Shapes Environmental Public Participation: Case Studies of China, the Netherlands, and Italy”, *Journal of Chinese Governance*.
- Wüstenhagen, R., M. Wolsink, M. J. Burer(2007),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nnovation: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Energy Policy*.

## [온라인 자료]

### 홈페이지 및 통계

- 국민생각함(2018.6.28.), “일회용품 사용 DOWN! 편리성 UP!”. (1차) 생각의 탄생, <https://idea.epeople.go.kr/vote/voteView.do?ideaCd=180628-00010&ideaImproveSeq=0000000001#none>, 검색일: 2019.8.28.
- 국민생각함(2018.7.23.), “일회용품 사용 DOWN! 편리성 UP!”. (2차) 생각의 발전, <https://idea.epeople.go.kr/idea/pollView.do?ideaCd=180628-00010&ideaImproveSeq=0000000002>, 검색일: 2019.8.28.
- 국토교통 통계누리, “대중교통현황조사 시도별 환승횟수 2018년”, <http://stat.molit.go.kr/portal/search/searchList.do>, 검색일: 2019.7.28.
- 분리배출 잡학사전, “분리배출 우수사례 ‘재활용 정거장’”,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3225&cid=60372&categoryId=60372>. 검색일: 2019.10.30.
- 서울정책아카이브, “서울주요정책: 교통분야”, <https://www.seoulsolution.kr/ko>, 검색일: 2019.10.6.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 “대중교통 분담률”, <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289>, 검색일: 2019.10.6.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전국 화재건수 2018년”, <https://www.nfds.go.kr/index.do>, 검색일: 2019.8.22.
- 숫자로 보는 인권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humanrightsdb.com/4-8-2-a/>, 검색일: 2020.1.2.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 검색어: 문화 정의, 검색일: 2020.05.29.

정부24 (2019.10.14), “빈용기 보증금제도”,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297>, 검색일: 2019.8.12.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 보증금제도”, <http://www.kora.or.kr/recycle/deposit.do>, 검색일: 2019.8.12.

환경부 홈페이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검색일: 2018.10.7.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빈용기 보증금제도”, <http://stat.me.go.kr/nesis/mesp/info/statPolicyRecycle3.do>, 검색일: 2019.8.12.

UNECE, <https://www.unece.org/env/pp/introduction.html>, 검색일: 2020.1.2.

#### 신문, 블로그

공정한 언론 타파인(2019.7.24), “‘쓰레기는 자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범도시 남원”, <http://www.tapain.com/news/article.html?no=7547>, 검색일: 2019.8.30.

국민일보(2019.1.18), “미세먼지 배출 위반 사업장 급증...불법소각 1년새 2배 늘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57533#RedyAi>, 검색일: 2019.9.4.

국민일보(2019.1.28), “제주, 대중교통 이용객 2000년대 들어 처음 ‘6000만명’ 돌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24273&code=61122027&cp=nv>, 검색일: 2019.8.6.

기호일보(2012.11.12), “‘통합환승’의 힘...인천 대중교통 이용객 5% 증가”,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510>, 검색일: 2019.8.26.

컨슈머치(2019.7.3), “일회용품 사용, 편리함만 쫓는 일”,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58>, 검색일: 2019.9.6.

김포미래신문(2016.4.8), “재활용업체 이물질 묻은 비닐 등 수거 거부 ‘주민혼란’”, <http://www.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28>, 검색일: 2019.8.30.

뉴스컬처(2018.9.14), “‘소비자리포트’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허와 실...빈병은 어디로”, <http://ncasiae.co.kr/view.htm?idxno=2018081708300033458>, 검색일: 2019.8.30.

대구신문(2016.1.19), “경산 시내버스 무료환승 7년...시민부담 350억 감소, 이용객 30% 증가”,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888>, 검색일: 2019.9.4.

- 매일경제(2019.1.9), “일회용품 규제에 착한소비 뜬다...텀블러·장바구니 매출 증가”,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582>, 검색일: 2019.9.6.
- 매일일보(2019.8.25), “일회용품 줄이기 규제 1년, 70% 대폭 감소”,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32393>, 검색일: 2019.9.6.
- 서울public news(2017.12.5), “금천구, ‘재활용 정거장’ 빌라촌 구석구석까지”,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6017017>, 검색일: 2019.8.12.
- 서울경제(2019.4.19), “일회용품 단속 한다더니...10개 지자체 적발건수 ‘0’”,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XDU6PXJ>, 검색일: 2019.9.6.
- 서울살이 서울앤(2017.4.13), “영등포구 쓰레기 23% 감량...비결은 주민참여”,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808.html](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808.html), 검색일: 2019.9.6.
- 세계일보(2019.4.1), “‘몇 백원이 뭐라고’...빈병 보증금은 ‘못 먹는 떡?’”,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31503480?OutUrl=naver>, 검색일: 2019.8.28.
- 울산저널(2016.2.4), “재활용품 분리매출 20년...시민의식 아쉬워”, <http://www.u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83641>, 검색일: 2019.8.30.
- 의정부뉴스(2017.2.27), “경기도 수도권 통합환승제 도입 10년...5조원 혜택”, <http://www.uj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69>, 검색일: 2019.8.26.
- 전북일보(2017.7.20), “빈병 보증금제도, 소비자 인식개선 절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432>, 검색일: 2019.8.28.
- 제민일보(2019.8.7), “서귀포 재활용 처리 시스템 개선 효과 ‘톡톡’”,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440>, 검색일: 2019.8.30.
- 주간동아(2017.10.17), “편의점주 올리는 ‘빈병보증금’”, <http://weekly.donga.com/3/all/11/1096503/1>, 검색일: 2019.8.28.
- 참좋은환경(2017.10.11),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등 여전히 만연”, <http://www.bes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 검색일: 2019.9.4.
- 한강타임즈(2017.12.5), “금천구, 재활용 정거장 확대 운영 실시”, <https://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227>, 검색일: 2019.8.30.
- 한국일보(2018.4.5), “형형색색 페트병에 이물질 라벨까지 붙이니...재활용 1등급은 0.1%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050425929921>, 검색일: 2019.8.30.

환경일보(2019.3.20), “‘그냥 일회용컵 쓰라’ 카페 일회용컵 규제 7개월의 민낯”,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732>, 검색일: 2019.9.6.

CJ헬로 지역방송 공식블로그(2018.4.12), “[전국 쓰레기 대란]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정책개선 우선?”, <https://blog.naver.com/localtv23/221251037756>, 검색일: 2019.8.30.

####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7.2.6), “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3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7576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검색일: 2019.8.29.

환경부 보도자료(2018.5.18),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http://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VffLUXePFHj-yjuXvBObya+.mehome1?pagerOffset=17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8643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검색일: 2019.8.29.



# Executive Summary

## I.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 In order to address the causes of environmental crisis and to build an eco-friendly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ssues of culture and philosophy beyond the problems of technology and knowled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increase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ies focusing on environmental culture.
-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green socie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hould be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eco-friendly practices of the public.
- As society develops, people's interest in and need for environmental culture is increasing, and thu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ulture is emphasized in decision-making.

## II. Theoretical Framework and Previous Research

### 1. Theoretical framework on environmental culture

- ❑ Human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regarding the environment are important to provide fundamental solutions to va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 Culture is defined both in a narrow sense and a broad senses. Culture in the narrow sense refers to the products of mental activity such as the

arts, science, ethics, religion, etc. Culture in the broad sense, on the other hand, refers to all human activities and the fruits of them.

- Environmental Culture has developed since the Rio Declaration in 1992,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democratic procedures in order to open up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making to the general public.
  - Environmental 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how human recognize, evaluate and address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cultural values ar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action.

## 2. Theoretical framework on acceptance

- As social problem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e necessity of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becomes pronounced, and the discussion of acceptance in all policy areas is important.
  - In general, acceptance can be defined as “determining the attitude toward a policy of a target group to accept or reject a given policy and the subjective expression of an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a policy and a people.” (Kim and Kwon, 2007; Chae et al, 2017)
- Social acceptance of policy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based on soci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because the will, attitude, and actual behaviors of a policy’s target group are a crucial factor. A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 3. Precedent research on acceptance factors of environmental policy

- ❑ Much research has been performed recently that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by country, region and case.
  - Acceptance factors commonly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can be suggested as direct and indirect factors.
    - Direct factors include rewards, incentives, people's livelihoods, habitat destruction, and location problems.
    - Indirect factors refer to personal, group, and social customs and norms, and include weak regulation, weak civic participation lack of mutual trust, and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III. Analysis on Acceptance Factors

### 1.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case study analysis

- ❑ The factors affecting policy acceptance were analyzed through media articles, reports, and stakeholder meetings.
  - Factors can be summarized into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nd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 lack of follow-up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insufficient education, low effectiveness, etc.
    -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selfishness, low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ejudice, etc.

2.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stakeholder meetings

- Acceptance factors were derived from various meetings with stakeholders who have experience related to environmental policy, and are as follows.

Table 1.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stakeholder meetings

Item	Factors
Participation,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li><li>- Delivery system between the policy making group and the target group' E.g. an intermediary organization</li></ul>
Trust building through a communication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Trust among stakeholders</li><li>- Trust in institutions formed through accurate information</li><li>- A communication system that collects opinions and provides feedback</li></ul>
Corporate autonom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E.g. SDGs reports, CSR reports</li><li>- Incentives</li></ul>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Ensuring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residents</li><li>- Disclosure system</li><li>- Feedback from government, institutions on residents' opinion</li></ul>
Information provision, policy promotion,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system</li><li>- Social learning</li></ul>

- Summary of acceptance factors
  -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can be summarized into seven categories.
    - Direct factors: rewards, incentives, right to live, habitat destruction
    - Weak regulations and civic participation
    - Lack of mutual trust and respect for diversity
    - Policy target group awareness of policy
    - Ensur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 Practical information production and systemic information delivery
- Transparent and democratic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

IV. Enhancing Policy Acceptance

- The types of environmental culture for enhancing of acceptance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1) A culture of policy formulation, 2) a culture of organization, 3) Pre-development, Post-environment, and 4) a culture of communication.
- Each type of environmental culture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policy acceptance.

Table2. Policy suggestions by type of environmental culture

Culture type	Policy suggestions
Transition of policy making culture	· Introduction of policy evaluation
	· Introduction of the publicized agenda-setting
	· Introduction of a deliberate participation method
Transition of organization·group culture	· Introduction of the open meeting system
	· Strengthe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Dissemination of customized eco-friendly guides
Transition of development project promotion methods	· Introduction of planned estate system
	· Improvemen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 Improvement of the publicization method for conflict resolution
	· Integration of environment, culture, transportation, conflict impact assessments
Transition of communication culture	· Dissemination of environmental influencers
	· Integrate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patch systems
	· Implementation of shame campaigns

## V. Conclusion

- This stud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in terms of environmental culture, and suggests various policy improvement methods by environmental culture type.
- In doing so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cedent research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policy target groups, policy making groups, communication metho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tc.
-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and specific policy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case study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with various experience and knowledge.

Keywords: Environmental Culture, Social Acceptance, Policy Acceptance

## ■ 저자약력

### 조공장 (연구책임)

일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kjcho@kei.re.kr

주요 연구실적

-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 (2016~18)
- 지역기반 참여형 연구방법론 연구(기후변화 리빙랩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2018)

### 정우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wchung@kei.re.kr

### 김도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현)

dkkim@kei.re.kr

### 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현)

sbkim@kei.re.kr

## KEI 연구보고서 목록 (2015~2019)

### 기후환경정책연구

발행연도 | 보고서 번호 | 보고서 제목 (연구책임)

- 2019년 2019-01-01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세먼지 예측 및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 연구 (이승민)  
2019-01-02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방안 (최기철)  
2019-02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 (김익재)  
2019-03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한상운)  
2019-04 기후변화적응정책 10년: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모색을 중심으로 (장훈)  
2019-05 기후변화 파리협정 적응보고 세부이행규칙 대응방안 연구 (강상인)  
2019-06 혼합정수계획법을 이용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평가 (김용건)  
2019-07 환경-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이상범)
- 2018년 2018-01 에너지전환을 고려한 중장기(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전략 (이상범)  
2018-02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 연계방안: 발전,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채여라, 전호철)  
2018-03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연구 (이승준)  
2018-04 기후환경 이슈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활용방안 연구 (진대용)  
2018-05 2018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강상인)  
2018-06 지역기반 참여형 연구방법론 연구: 기후변화 리빙랩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신용승, 조공장)  
2018-07 사회·환경영향을 고려한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입지 방안 연구 (김태현, 이상범)
- 2017년 2017-01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연구 Ⅰ (이상범)  
2017-02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방안 (이승준)  
2017-03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지역 기후경쟁력 증진 방안 (류재나)  
2017-04 신기후체제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 분석 (강상인)  
2017-05 기후행동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전략 마련: 물-에너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최희선)  
2017-06 이상기온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 (배현주, 정다운)
- 2016년 2016-01 미래환경 전망 및 지속가능사회 비전설정 기반 구축 (조공장)  
2016-02 환경과 문화예술 콘텐츠 융합을 통한 기후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신용승)  
2016-03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황인창)  
2016-04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한 미래 물수급 관리정책 마련(Ⅰ) (류재나)



- 2016-05 물이용 지속성의 평가와 미래 전망 (김익재)
  - 2016-06 최민국 지역정부의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장훈, 송영일)
  - 2016-07 신기후체제 협상 대응 및 기후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연구 (강상인)
- 2015년
- 2015-01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지속가능한 환경재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강만옥)
  - 2015-03 생태계서비스 측정체계 기반구축(Ⅱ): 하천생태계를 중심으로 (안소은)
  - 2015-03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Ⅱ):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이희선, 조지혜)
  - 2015-04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과 대응전략 (Ⅱ) (이승준, 이상윤)
  - 2015-05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연구 (한진석)
  - 2015-06 배출권거래제도의 벤치마크 사례 국제비교 연구 (공성용)
  - 2015-07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Ⅲ):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 관리방안  
개선 (권영한, 이승준)
  - 2015-08 넥서스 기반 통합적 기후환경 대응체계 구축 연구: 도시지역 기후적응정책 문제를 중심으로 (김동현,  
송영일)
  - 2015-09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Ⅱ) (안종호, 김익재)

#### 연구보고서/기본연구

- 2019년
- 2019-01 한반도 신경제지도 녹색화 전략 연구 (이정호)
  - 2019-02 속의적 접근을 통한 하천 자연성 회복 정책 도출 연구 (조을생)
  - 2019-03 폐기물 자원순환의 국제 동향과 영향 분석 (신상철)
  - 2019-04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정립 방안 (최희선)
  - 2019-05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조공장)
  - 2019-06 육상화물운송수단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연구 (한진석)
  - 2019-07 지자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이승민, 신동원)
  - 2019-08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연구 (신지영)
  - 2019-09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 정책방안 연구 (조을생, 이소라)
  - 2019-10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계획의 통합 및 조정 방안 연구 (안종호, 한대호)
  - 2019-11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
  - 2019-12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및 지역별 대응 전략 (심창섭, 김오석)
  - 2019-13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신경희)
  - 2019-14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소규모 소각시설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영준)
  - 2019-15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SDGs 반영방안 (이정석)
  - 2019-16 지방분권 시대 지자체 환경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방안 (정우현)

- 2019-17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이소라)
- 2019-18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영향 연구 (김익재)
- 2019-19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활용 체계 구축(Ⅱ) (이명진)
- 2019-20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이후승)
- 2019-21 소음노출의 위해성을 고려한 비용편익 연구(이병권)
- 2019-22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기법 연구 (류재나)
- 2019-23 Construction of Historical Map Database as a Basis for Analyzing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Exemplified by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nd Inner-German Green Belt (Part Ⅱ) (김오석)

- 2018년 2018-01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사공희)
- 2018-02 원자력시설 해체 부지의 재사용을 위한 환경관리 전략: 토양 및 지하수 분야를 중심으로 (신경희)
- 2018-03 폐기물처리방법별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평가 연구 (이소라)
- 2018-04 토양오염부지의 환경매체 연계관리 방안 (황상일, 양경)
- 2018-05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서양원, 조지혜)
- 2018-06 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 (김유미, 조지혜)
- 2018-07 우리나라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명수정)
- 2018-08 복합재난(Natech)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박정규, 서양원)
- 2018-0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최희선)
- 2018-10 점오염원 질소관리 정책강화 타당성 평가 (안종호)
- 2018-11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 방안 (김익재)
- 2018-12 토지피복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책적 활용 기반 마련 연구 (윤정호, 김근한)
- 2018-13 고령자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김현노)
- 2018-1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누적위해성평가 연구 (정다윤)
- 2018-15 Construction of Historical Map Database as a Basis for Analyzing Land-Use and Land-Cover Changes, Exemplified by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nd Inner-German Green Belt(Part Ⅰ) (김오석)
- 2018-16 가뭄지역 농촌용수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지하수-지표수 복합이용을 대안으로 (김경호)
- 2018-17 생태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지역단위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방안 (구경아)
- 2018-18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구축 (Ⅰ) (이명진)
- 2018-19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연구: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이정호)

- 2017년 2017-0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도시·군관리계획(재정 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이영재)
- 2017-02 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문현주, 김현노)
- 2017-03 IPCC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분석 (채여라)

2017-04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Ⅱ) (서양원, 박정규)  
 2017-05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이상엽)  
 2017-06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신용승)  
 2017-07 환경영향평가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하종식)  
 2017-08 이차전지의 폐자원흐름 분석 및 자원순환성 제고방안 (조지혜)  
 2017-09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Ⅱ) (김충기)  
 2017-10 매립자원의 순환이용 가능량 분석 및 미래형 매립지 관리전략 마련 연구 (이소라)  
 2017-11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김익재)  
 2017-12 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이희선)  
 2017-13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빅데이터 분석 과 위성영상 활용을 중심으로 (이명진, 이정호)  
 2017-14 기저유출을 고려한 환경가뭄 평가방안 연구 (현윤정)  
 2017-15 해수담수화에서 생성되는 농축수의 환경적 영향과 평가 (김태윤)  
 2017-16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역간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분석 (전호철)  
 2017-17 지권과 생물권 간 공진화 현상에 기반한 국토 자연환경 관리방안 (이수재)  
 2017-18 사회인지이론의 적용을 통한 환경친화적 행동 촉진에 대한 연구 (이정석, 강택구)  
 2017-19 지역별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진석)

2016년 2016-01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Ⅱ) (신용승, 배현주)  
 2016-02 도시의 기후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공간단위별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Ⅱ) (김동현)  
 2016-03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연구 (추장민)  
 2016-04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관리 방안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  
 2016-05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Ⅰ) (이현우)  
 2016-06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Ⅱ) (황상일)  
 2016-07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시설 투자 방향 연구 (류재나, 강형식)  
 2016-08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전기·전자제품의 upcycling 활성화 방안 (이희선)  
 2016-09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이소라, 신상철)  
 2016-10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해폐기물 성상별 최적 관리방안 (조지혜, 김태현)  
 2016-11 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방상원)  
 2016-12 정부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Ⅱ) (김태현)  
 2016-13 랜덤워크를 이용한 생태네트워크 변화 모의예측방안 연구(Ⅱ) (김지영)  
 2016-14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박정규, 서양원)  
 2016-15 교통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효과 추정방안 연구: 도로이동오염원을 중심으로 (한진석)  
 2016-16 기후·대기 환경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건강 위해성 평가 개선 연구: 농도 반응함수의 국내 표준안을 중심으로 (하종식)  
 2016-17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Ⅱ) (박창석)

- 2016-18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II) (김오석)
- 2016-19 ICT 발전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간정보의 환경이슈 적용 체계 구축 (이명진, 이정호)
- 2016-20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II): 원격탐사를 이용한 자연환경성 우수지역 평가 (정휘철)

- 2015년
- 2015-01 친환경적 행동의 불편비용과 정책적 시사점 (강만옥)
  - 2015-02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이상윤)
  - 2015-03 환경생태유량, 친수용수 등 물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물환경 정책 개발 연구 (김호정)
  - 2015-04 지역기반 환경보전정책 지원 방안 연구(I):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배현주, 신용승)
  - 2015-05 육상 생태 보호지역 확대 추진 방안 연구 (이수재)
  - 2015-06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을 위한 폐자원 및 잔재물 흐름분석 (이희선)
  - 2015-07 환경평가시 대안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범)
  - 2015-08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역자원 관리 방안(I) (이정호, 박창석)
  - 2015-09 동북아 지역 FTA 환경영향대응 및 환경·경제 통합협력전략 연구 (추장민)
  - 2015-10 북한 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I): 토지피복지도 구축을 중심으로 (정휘철)
  - 2015-11 지중 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I) (황상일)
  - 2015-12 지하수 의존도에 따른 수생태계 관리를 위한 기저유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강형식, 현윤정)
  - 2015-13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통합모델 개발(I) (김오석)
  - 2015-14 도시의 기후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공간단위별 평가 체계 및 모형 개발(I) (김동현)
  - 2015-15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인프라 사고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류재나)
  - 2015-16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 마련 (서양원, 박정규)
  - 2015-17 랜덤워크를 이용한 생태네트워크 변화 모의예측방안 연구(I) (김지영)
  - 2015-18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소음환경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박영민)
  - 2015-19 Bridging Livable City Development over Local Climate Smart Development under UN SDGs (장 훈)
  - 2015-20 정부 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I) (김태현)

#### 정책보고서/수시연구

- 2019년
- 2019-01 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허가조건 평가 및 개선방안 (공성웅)
  - 2019-02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이영준B)
  - 2019-03 물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이병국, 김익제)
  - 2019-04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 진단과 복원 방향 (명수정)
  - 2019-05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추이 및 한중 간의 오염도 상관관계 분석 (주현수)
  - 2019-06 국가 지속가능성 이행과제 간 연관관계 분석방안 연구 (홍한움)
  - 2019-07 수송용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신동원)
  - 2019-08 DMZ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방향 (김오석)

2019-09 생활밀착형 환경이슈에 대한 수요반영 개선 연구: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진대웅)  
 2019-10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방안 (전동준)  
 2019-11 P4G 파트너십 의제 개발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김호석)  
 2019-12 지역단위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상철)  
 2019-13 환경성·형평성을 고려한 수송용 에너지 적정가격 설정 및 세수 활용 방향 (강만옥)  
 2019-14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이소라)  
 2019-15 시공간을 고려한 환경생태적 우수지역과 환경성질환의 상관성 분석 연구: 환경·국토계획 통합 계획에서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김근한)  
 2019-16 인체위해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구성성분별 건강영향 연구 (배현주)  
 2019-17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 연구 (현윤정)  
 2019-18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여건별 폭염 체감 영향 분석 (채여라, 최영웅)  
 2019-19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방안 연구 (김경호)  
 2019-20 교통소음 관리 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박영민)  
 2019-21 중국의 대기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강화 방안 (최기철)  
 2019-22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한환경 연구로드맵 수립 - 북한 환경실태 기초조사를 통한 미래 친환경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 (추장민)

2018년 2018-01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조지혜)  
 2018-02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방향 (이상엽)  
 2018-03 LCA에 기반한 전기차의 발전원별 환경효과 분석 (이소라)  
 2018-04 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상운)  
 2018-05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 연구 (김호정)  
 2018-06 환경부문 헌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조공장)  
 2018-07 신규 농업시설물의 수질오염 관리방안 마련 연구 (류재나)  
 2018-08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중심으로 (한진석)  
 2018-09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 개선 방안 (김익재)  
 2018-10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정책 개선방안 (박영민)  
 2018-11 국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전동준)  
 2018-12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신상철)  
 2018-13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및 정책 제언 (박정규)  
 2018-14 차량-야생동물 충돌사고(WVC) 제어와 방지를 위한 적정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오송역~세종시 고속화도로를 중심으로 (방상원)

2017년 2017-01 지진의 환경영향 및 대응방향 (현윤정)  
 2017-02 수용제 중심의 환경정책 활용을 위한 대기오염의 노출위험인구 산정 연구 (배현주)  
 2017-03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평가 미래 발전 전략 (이영준)

- 2017-04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채여라)
- 2017-05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뉴 패러다임 개발 (추장민)
- 2017-06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개선방안 (김유미)
- 2017-07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분석 (김태현)
- 2017-08 산업단지 토양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양경)
- 2017-09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명수정)
- 2017-10 아시아 지역 거점 바이오브릿지 헬프데스크 구축방안 연구 (오일찬)
- 2017-11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김익재)
- 2017-12 군부대 주둔 및 이전 부지의 환경관리 정책: 토양·지하수 환경을 중심으로 (박용하, 이정호)
- 2017-13 국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김호석)
- 2017-14 자연적 원인에 의한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황상일)
- 2017-15 환경정의 측면의 녹지접근성 분석 연구 (명수정)
- 2017-16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환경영향평가 조사방안 연구 (이상범)
- 2017-17 환경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탁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유현식)
  
- 2016년 2016-01 가뭄 단계에 따른 적응형 가뭄관리정책 연구: 지역 차원의 비구조적 가뭄대책을 중심으로 (김호정)
- 2016-02 나노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관리전략 수립 연구 (조지혜)
- 2016-03 TPP 환경관련 협정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추장민)
- 2016-04 화학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을 위한 방법론 진단 및 선정 방안 연구: 인적·생태적 피해액 추정을 중심으로 (서양원, 곽소윤)
- 2016-05 제주 탄소제로섬 추진전략 연구 (이병국)
- 2016-06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조공장)
- 2016-07 토양정화 곤란 부지의 최적 관리방안 연구 (박용하)
- 2016-08 실도로에서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구 (강광규)
- 2016-09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관한 대응방안 (이승준)
- 2016-10 대기환경비용을 고려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실효성 제고 연구: 차종별 적정 보조금 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한진석)
- 2016-1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강화에 따른 국가지질공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수재)
- 2016-12 신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 연구 (김이진, 이상엽)
- 2016-13 EU REACH 시험자료 분석을 통한 화평법 지원방안 연구 (박정규)
- 2016-14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현윤정)
- 2016-15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이영재)
- 2016-16 미래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과제 개발과 환경거버넌스 발전 연구 (추장민)
  
- 2015년 2015-01 Wat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A Country Case Study (안종호)
- 2015-02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설정 연구 (주현수)
- 2015-03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오일찬)

- 2015-04 토양의 이동에 대한 합리적 관리제도 마련 연구 (황상일)
- 2015-05 국내 산지 능선의 지질-식생 상관관계 분석 (이수재, 이명진)
- 2015-06 환경분야 한중 FTA 활용 및 대책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추장민)
- 2015-07 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 실태분석 및 환경관리 방안 (이영재)
- 2015-08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질 영향 분석 연구 (이승민)
- 2015-09 지자체의 보건의료시설 기후 회복력 강화·관리 방안 연구 (하종식)
- 2015-10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기반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 (박용하)
- 2015-11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관리 선진화 연구 (신상철)
- 2015-12 AIIB 출범과 GCF 운영을 고려한 한국 환경외교의 방향 및 정책 과제 (이정석)

Working Paper
---------------

- 2019년 2019-0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용체 중심 위해관리 기반 연구 (정다운)
- 2019-02 환경규제 동향분석 및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포럼 자료집 (김현노)
- 2019-03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이진희)
- 2019-04 저주파 소음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선효성)
- 2019-05 지속가능한 해양활용을 위한 해양환경통합자료 적용 연구 (김태운)
- 2019-06 선형 교통사업의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권선용)
- 2019-07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도 구축을 위한 드론 영상과 이미지 검색 기술의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 (김근한)
- 2019-08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 방안 마련 기초 연구: 합리적 물 수급 분석 방안 연구 (서승범)
- 2019-09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론과 BIM의 적용 가능성 검토 기초 연구 (유재진)
- 2019-10 삶의 만족도 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전호철)
- 2019-11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 동향 연구 (주문술)
- 2019-12 매립장 유래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침출수 발생원을 중심으로 (지만규)
- 2019-13 환경정책연구에서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진대용)
- 2019-14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최현진)
  
- 2018년 2018-01 에너지 수요전망모형 개발 기초연구 (전호철)
- 2018-02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연구 (이영준)
- 2018-03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의 항목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상윤)
- 2018-04 조류충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이후승)
- 2018-05 드론을 이용한 대기환경 조사기법 분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윤정호)
- 2018-06 서울 미세먼지(PM10) 농도의 시공간 통계분석 활용방안 연구 (홍한운)
- 2018-0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이상범)
- 2018-08 온실가스 배출량의 소득탄력성 추정 연구: 함수계수 패널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전호철)
- 2018-09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권선용)

- 2018-10 대기 이미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오염도 추정 (진대용)
- 2018-11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I): 녹색활동 및 경제운영시스템 (김종호)

- 2017년 2017-01 불확실성과 학습효과를 반영한 기후경제 모형 방법론 연구 (황인창)
- 2017-02 환경경제 분석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의 활용방안 연구 (채여라, 정예민)
- 2017-03 인도 물관리 정책의 비교분석과 환경협력 확대 방향 (김익재)
- 2017-04 산림경영사업지의 개발용지 전환 사례조사 및 개선사항의 도출 (방상원)
- 2017-05 환경분야 빅데이터 수집방법 연구: 대기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진)
- 2017-06 에머지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평가: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이승준)
- 2017-07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노후건물의 재정비 시나리오별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송지윤)
- 2017-08 Smart waste 및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주민참여형 애플리케이션 활용 연구 (이소라, 임혜숙)
- 2017-09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정책 마련 기초연구 (신동원)
- 2017-10 주요국가 환경정책 트렌드 분석연구 (명수정, 문현주, 신용승, 전호철)
- 2017-11 한국의 녹색경제지수 산정 (김종호)
- 2017-12 합성생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연구동향 (오일찬)

- 2016년 2016-01 시스템과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미래 환경정책 방향 연구 (이승준)
- 2016-02 공공자료 분석을 통한 친환경적 풍력에너지 개발 기초 연구 (김태운)
- 2016-03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이상운)
- 2016-04 자율주행 자동차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이승민)
- 2016-05 미래 고온환경 변화와 직종 간 임금격차 추정 (김동현)
- 2016-06 드론을 이용한 환경재난 사후대응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연구 (손승우)
- 2016-07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송지윤)
- 2016-08 근지표환경 임계영역(Critical Zones)의 환경적 중요성과 환경 관리의 미래 이슈 (현윤정)
- 2016-09 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김윤정)
- 2016-10 환경평가 자료의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김태형)
- 2016-11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 (명수정)
- 2016-12 건강영향평가 분야에서의 위해소통을 위한 리스크 테이블 제작 연구 (하종식)
- 2016-13 해의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환경전략/대기환경/물환경/국토자연/자원순환 부문 (조일현, 공성용, 한대호, 홍현정, 한상운)
- 2016-14 해의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환경평가 부문 (박하늘)
- 2016-15 해의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온실가스 감축 부문 (김이진, 간순영)
- 2016-16 지하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김경호)
- 2016-17 토양자원 관리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양경)
- 2016-18 미세조류 바이오매스의 자원화 활용에 대한 연구: 바이오 (기능성)소재를 중심으로 (지민규)
- 2016-19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곽소윤)



- 2015년 2015-01 싱크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김윤승)
- 2015-02 이슈스캐닝(Horizon Scanning)기법 활용을 통한 물환경관리 부문 이머징 이슈 발굴 (한혜진)
- 2015-03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비교분석 및 국내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황인창)
- 2015-04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환경 근로자의 작업역량 저하 추정과 공간적 군집 파악 (김동현)
- 2015-05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공청회 운영 현황 분석 (조공장)
- 2015-06 도로 및 철도 사업의 토양분야 환경영향평가 사례연구 (신경희)
- 2015-07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보건서비스에 관한 기초연구 (간순영, 윤성지)
- 2015-08 자원순환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임혜숙)
- 2015-09 내륙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I: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지침(2011)의 적용을 중심으로 (방상원)
- 2015-10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이소라)
- 2015-11 환경소음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 (박영민)
- 2015-12 인과지도(Causal Loop)를 활용, 미래 물수급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류재나)
- 2015-13 생물안전 법제 기초 연구 (홍현정)
- 2015-1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 (선효성)
- 2015-15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영향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진희)
- 2015-16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개선방안 (이상범)
- 2015-17 환경가치 중장기 연구 수요 조사 (곽소윤)
- 2015-18 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질 관리 기획 연구 (심창섭)
- 2015-19 2015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곽소윤)

## 사업보고서

- 2019년 2019-01 동아시아 녹색전환을 위한 국제환경네트워크 구축 (이현우)
- 2019-02-01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데이터 기반 폭염 및 한파의 직간접 영향 분석 (채여라)
- 2019-02-02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별책부록: 수요자의 인식을 고려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방안(II) (채여라)
- 2019-03-01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김호석)
- 2019-03-02 KEI 북한환경동향 2019년 (김호석)
- 2019-04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VI) (류재나, 김익재)
- 2019-05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V) (김충기)
- 2019-06-01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선박 및 발전시설의 미세먼지 기여도 분석 (문난경)
- 2019-06-02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 입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의 현황 및 배출원 특성 분석 (김유미)

	2019-06-03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서식지 질적 변화 (전동준)
	2019-06-04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 체계 마련 (박종윤)
	2019-06-05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이병권)
	2019-06-06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및 환경적 가용 입지 분석 (이영준)
	2019-07-01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김현노)
	2019-07-02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별책부록: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 (김현노)
	2019-08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Ⅲ (강성원)
	2019-09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심창섭)
	2019-10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피해 저감 연구 (박정규)
	2019-11-01	녹색경제협동연구 성과확산 (현윤정)
	2019-11-02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김현노)
	2019-11-03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 연구(Ⅰ): 위해저감 및 녹색 소비 방안을 중심으로 (정다운)
	2019-11-04	글로벌 녹색전환 네트워크 구축 (김호석)
2018년	2018-01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체감형 적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Ⅱ) (채여라)
	2018-02-01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총괄보고서 (이현우)
	2018-02-02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김태현)
	2018-02-03	KEI 북한환경동향 2018년 (이현우)
	2018-02-04	KEI 일대일로포럼 자료집 (이현우)
	2018-03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V) (류재나, 황상일)
	2018-04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Ⅳ) (황상일)
	2018-05-01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자체별 오염원별·물질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문난경)
	2018-05-02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해대기오염물질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반 구축 (문난경)
	2018-05-03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개발 적정성 분석 (이영준)
	2018-05-04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평가 체계 개발(금강수계를 중심으로) (박종윤)
	2018-05-05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현황과 환경적 고찰 (박종윤)

2018-06-01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안소은)  
 2018-06-02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부문별 영향평가 및 가치추정 (안소은)  
 2018-06-03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별책부록: 2018 국민환경의식조사 (안소은)  
 2018-07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3): 중장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공장)  
 2018-08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II (강성원)  
 2018-09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주현수)  
 2018-10-01 2018 녹색경제협동연구 사업보고서 (안종호)  
 2018-10-02 한국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김종호)  
 2018-10-03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재정 구축 방안: 지속가능발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환경재정 개편 방향 (김호석)  
 2018-10-04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II) (문현주)  
 2018-10-05 국가 친환경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총괄연구 (이상엽)  
 2018-10-06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평가 기반마련 연구: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신용승, 조공장)  
 2018-11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 방안 연구(III) (황상일, 현윤정)

2017년 2017-01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IV) (류재나, 강형식)  
 2017-02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III) (안소은)  
 2017-03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III) (황상일)  
 2017-04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난경, 이영준, 박종윤)  
 2017-05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안소은)  
 2017-06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조공장)  
 2017-07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강성원)  
 2017-08-01 녹색경제 성과확산 (공성용)  
 2017-08-02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 (I) (문현주)  
 2017-08-03 환경유해보조금 추계 및 개편방향 연구: 화석연료보조금을 중심으로 (김종호)  
 2017-08-0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친환경 소비 확산방안 (김동현)  
 2017-08-05 자연해택 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II) (김충기)  
 2017-08-06 메콩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연구 (강상인)  
 2017-09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II) (황상일, 현윤정)  
 2017-10 석탄화력발전 연료대체 시나리오별 환경·건강영향 분석 (주현수)  
 2017-11 어린이 환경건강 관리 개선방안 연구 (정다운)  
 2017-12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이승준)  
 2017-13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채여라)  
 2017-14-01 (총괄)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성과 확산 (추장민)  
 2017-14-02 지속가능한 동시베리아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연구 (강상인)

2017-14-03 환경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공참여제도 한·중 비교연구 (정우현, 이정석)

2017-14-04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환경협력 추진전략 (추장민)

2017-14-05 KEI 북한환경동향 2017년 (추장민)

- 2016년
- 2016-01-01 기후환경 대응역량 평가체계 구축 (채여라)
- 2016-01-02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Ⅲ): 연안시스템을 중심으로 (조광우)
- 2016-02 개발사업의 소음모니터링 분석과 개선방안 (선효성)
- 2016-03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운용(Ⅲ) (강성원, 박창석)
- 2016-04-01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석)
- 2016-04-02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Ⅰ) (강택구)
- 2016-05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Ⅲ) (강형식)
- 2016-06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Ⅱ) (안소은)
- 2016-07 셋강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Ⅱ) (강형식)
- 2016-08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이현우)
- 2016-09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난경)
- 2016-1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이창훈)
- 2016-11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중장기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조공장)
- 2016-12-01 2016 녹색경제협동연구 사업보고서 (이창훈)
- 2016-12-02 녹색경제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김중호)
- 2016-12-03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 구축을 통한 친환경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곽소윤)
- 2016-12-04 자연해택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Ⅰ) (김충기)
- 2016-12-05 태대지역 녹색경제 이행과 메콩유역 농업부문 융합혁신 전략 연구 (강상인)
- 2016-13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황상일)
- 2016-14 대도시지역의 극한 홍수로 인한 복합영향 매커니즘 분석 (채여라)
- 2015년
- 2015-02-01 환경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자원관리의 발전전략 (권영한)
- 2015-02-02 화력발전소 회차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연구(Ⅱ) (맹준호)
- 2015-02-03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략환경평가방안 연구 Ⅱ: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선정 방안을 중심으로 (김태윤)
- 2015-03-01 기후환경 리스크 전망과 국가전략(Ⅱ) (박창석)
- 2015-03-02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 (Ⅱ): 연안시스템을 중심으로 (조광우)
- 2015-04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이영준)
- 2015-05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운용(Ⅱ) (김용건)
- 2015-06-01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새마을운동 재조명 (강택구)
- 2015-06-02 북한지역 하천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2): 압록강유역 하천보전 및 지속가능개발 국제협력방안 (추장민)

2015-06-03 동아시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심창섭)

2015-07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II) (강형식)

2015-08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안소은)

2015-09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이현우)

2015-10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난경)

2015-11 셋강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I) (강형식)

2015-12-01 환경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연구 (강만옥)

2015-12-02 Post-2015 SDGs 대응 녹색경제 이행 전략 연구 (강상인)

2015-12-03 자원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평가 방법론 개선: 폐기물산업연관표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신상철)

2015-12-04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II): 메콩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유현석)

2015-12-05 환경분야 일자리 수요 현황 및 전망 (김종호)

2015-13-01 캄보디아-한국 환경연구센터 설립의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유현석)

2015-13-02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the Water-Food-Energy Nexus (I) (김호석)

2015-14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 (이현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보고서 원문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http://www.k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용지로 인쇄되었습니다.

##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Enhancing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ies  
: Focusing on Environmental Culture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8~11층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http://www.kei.re.kr>

